

월간
재정포럼

2020. September_Vol.291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9

권두칼럼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자 | 박정수

현안분석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고 | 허경선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 정재호

특집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 박창환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김우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사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 최종 규정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자 | 박정수 02

현안분석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고 | 허경선 08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 정재호 30

특집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 박창환 50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김우현 5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사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 최종 규정 발표 외 76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장

데자뷰(deja vu)는 프랑스어로 ‘이미 본’이라는 뜻으로, 최초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겪은 것 같은 착각을 일컫는 말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뉴 노멀(New normal)을 이야기할 정도로 과거와는 분명히 결이 다른 파고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내성이 쌓여 이러한 기시감에 오히려 과급효과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이 필요한 때

연초부터 전 세계 경제가 봉쇄(lockdown)와 해제를 반복해 보건의로 당국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소상공인 등에게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사람 간 접촉과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라서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어르신 보호 시설 방문도 금지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코로나 블루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도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1, 2분기 각각 -1.3%와 -3.3% 역성장했다. 두 분기의 연속 역성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활동 규모가 줄어드는 경기후퇴(recession)가 현실화된 것이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5.3%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감소 폭은 더 컸다.

정부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등을 반영한 「135조원+ α 금융지원 패키지」를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는 등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는 지출 구조조정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경 재원으로 전환 활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수준인데 전 부처 모든 사업의 집행 여건을 점검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규모가 3.7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IMF의 Fiscal Monitor(2020년 6월)에 의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GDP 대비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인데, 재정지원으로만 국한해 보면 미국 12.3%, 일본 11.3%, 독일 9.4%, 영국 6.2%, 이탈리아 3.5%, 프랑스 2.7%로 우리나라(3.1%)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 정도다. 개인소득 지원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업 및 휴직 급여 등 기존의 실업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타깃그룹을 분명히 한 고용유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침체 시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즉 충분한 규모의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통화 당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재정지출 및 통화공급 확대로 인한 수요 과잉 또는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단기적인 문제는 해외 신용평가사 등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도이며, 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반전 모색해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부분도 이에 대한 전제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이 장기 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우려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감소가 공급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장기적으로 기계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일자리가

.....

경기침체 시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즉 충분한 규모의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편이며, 수요 과잉 또는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본다.

.....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추이는
하향 추세이지만
제도적 변화를
수반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반전이
가능하다.**

줄어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환경의 진전과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가 상충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작용하여 경제에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과 건강수명의 증가, 은퇴 연령의 조정, 노후소득 및 건강보험 체계의 재구조화가 하나같이 매우 지난한 과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까지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한 정치·경제 환경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재정건전화는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지난 7월 제21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 진행된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추이는 하향 추세이지만 제도적 변화를 수반한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반전이 가능하다.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이지만 규제 혁파를 통해 기술혁신 생태계를 형성하고 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혁신이 중요하다. 더불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글로벌 표준의 제도개혁이 긴요하다.

2011회계연도부터 작성하고 있는 ‘국가재무제표’에는 국가의 다양한 사업규모, 주요 재원조달 수익, 국가부채 규모 등 유용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총 200.1조원의 오류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등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감사원의 역량 강화와 결산정보의 환류라는 제도혁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2018년 4월 출범해 재정개혁의 100년 로드맵을 그리고자 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포용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신뢰성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추진이 필요하다. 중앙-지방-지방교육의 재정정보를 일반정부 수준에서 통합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했기에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나라살림 정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차세대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 총지출 변동의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임을 다하도록 했으며, 전략적 지출검토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분야 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구조조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근본적 재정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이룰 기회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채무가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근본적 재정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돌도 없이 좋은 기회라고 본다. 정부 전체(whole of government) 관점에서 국민의 부담을 파악하고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기재정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2022년까지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금개혁도 시작해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의 2060년 장기전망에 의하면, 일반재정부담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사회보험부담은 2018년 GDP 대비 6.9%에서 2060년 23.8%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취약한 사회보험 영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인데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틀의 근본적인 변화,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비용 관리 관련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KIP](#)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채무가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재정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근본적
 재정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돌도 없이
 좋은 기회라고 본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고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

정재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소고¹⁾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kheo@kipf.re.kr)

I. 서론

공공기관은 정부가 설립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성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성과 수익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투자를 위해 수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은 모두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강조가 다르게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공익성 확대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국정과제 12)’이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운영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²⁾의 입법이 추진되었고,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어 계속 추진되고 있다.³⁾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단기간 내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부사업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추가하였다. 중앙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17년 평가지표에 일자리사업에 대한 가점을 10점 추가하였으며, 기존 지표인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과 ‘정부권장정책’ 지표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

1) 본고는 허경선 외(2020, 발간예정)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재무성과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2) 2017년 10월 박광온 의원 등 21인에 의해 제안되었다.

3) 2020년 6월 1일 박광온 의원 등 16인에 의해 제안되었다.

고 해당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였다. 2018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를 신설한 후 배점을 확대하였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평가항목은 2016년에는 전체 100점 중 7점이었으나 2018년에는 22점, 2019년 24점으로 대폭 확대되어 평가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전 및 환경 관련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⁴⁾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가치의 추진에 대해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위의 모호함이다. 사회적 가치 추진의 초기에는 이전부터 기업 운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사회 공헌과 새롭게 추진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관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추구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재무성과나 효율성과 관련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부채의 규모가 커진 반면, 이익의 규모는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채용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인력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의 증가와 효율성의 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발생하고 있다.

본고는 2017년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도입과 추진 현황,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제III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2017년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도입과 추진 현황,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2019년 말까지 집계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추진의 가시적 성과로는 공공기관 일자리 증가(2017~2019년 3만 4천명 증가(누적)), 공공기관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2017년 59명 → 2019년 37명),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도 개선(2017년 8.29 → 2019년 8.46, 권익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개선(2017년 2.9% → 2019년 3.2%) 등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장을 전략 추진」, 보도자료, 2020. 7. 21.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기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배경으로 한다.

II.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1. 도입 배경과 추진 과정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기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배경으로 한다. 그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에 입각한 공공기관 관리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익성에 중점을 두면서 기관의 공공성이 훼손되었고,⁵⁾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관점의 공공기관 평가가 지나친 수익 추구하고 노동인력의 과도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결과로 공공기관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시하고, 공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하게 되었으며, 최근 비정규직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와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국정과제 12)’을 포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정부의 공공 분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은 이전의 부수적이고 추가적이었던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원칙이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의 내용을 포괄하는 관련 입법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4년부터 추진되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이 2014년 6월, 2016년 8월, 2017년 10월에 발의되었으며, 2020년 6월에는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어 계속 추진 중이다.⁶⁾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의 주요 내용은 이 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의 목표는 공공부문의 운영에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공공부문에는 중앙정부, 지자체를 비롯하여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

5)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보도자료, 2020. 1. 15.

6) 2020년 6월 1일 박광온 의원 등 16인에 의해 제안되었다.

는 공공서비스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달 및 민간위탁,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이 법안에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 범위, 관련 공공기관의 책무, 공공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계획,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해당 계획은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에서 동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추진 정책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에서 명시한 사회적 가치와 범위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바”로 정의하고 있다.⁷⁾ 사회적 가치의 범위에는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13가지의 대표적인 세부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세부 가치의 내용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실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정부혁신의 핵심원칙으로 선정(2018. 3.)하였으며, 정부혁신평가(2018. 5.), 지자체 합동평가(2018. 3.)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으로 포함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2017.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을 확정 및 발표(2020. 1.)하였다. 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2020. 1.)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높은 부처에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다양한 평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선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도입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공공부문의 실제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새로운 운영원칙을 조직이 받아들이고 실제 이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통해 실현하는 데 강력한 외부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7)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보도자료, 2020. 1. 15.

사회적 가치의 범위에는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13가지의 대표적인 세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세부 가치와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 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 의 보장과 근로조건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 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 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출처: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보도자료, 2020. 1. 15, p. 2

2. 사회적 가치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에서 가장 핵심인 정책수단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결과에 따라 전 직원 성과급, 기관장 성과급, 기관장 해임 권고 등이 결정된다. 공공기관은 특성상 경영환경의 변화나 시장경쟁이라는 외부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의 방법, 평가지표, 배점 등을 미리 확정하고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한다.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 등은 정부의 정책 및 공공기관과의 지표개선 작업을 통해 매년 조정되며, 경영평가의 지표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에서 가장 핵심인 정책수단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공기업 기준)

연도	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2010	경영성과	경영효율화	정부권장정책(2)
2011~2014	리더십, 책임경영	사회적 기여	사회공헌(2)
			정부권장정책(5)
2015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2)
			정부권장정책(5)
2016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2)
			정부권장정책(5)
2017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5)
			정부권장정책(6)
	가점	가점	일자리 지표 가점(10)
2018	경영관리	2.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 가치 구현(22)
2019~2020	경영관리	3.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 가치 구현(24)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0~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 등은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되며, 경영평가의
지표와 배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태와
성과가 달라진다.**

배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태와 성과가 달라진다.

사회적 가치와 관계 있는 지표는 이번 정부 이전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되어 있었다. 2010년에는 정부권장정책 지표(2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1년부터는 사회공헌(2점), 정부권장정책 지표(5점)가 포함되었다. 2015년부터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2점)과 정부권장정책(5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2017년에는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5점)과 정부권장정책(6점)의 배점이 확대되었고 일자리 지표 가점(10점)이 추가되었다.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경영관리 범주에 별도 지표로 도입되었으며 공기업은 22점, 준정부기관은 20점이 배점되었다. 2019년에는 이전 연도 평가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지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이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에 도입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이전의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지표의 사회적 책임 평가 부분과 ‘정부권장정책’ 지표, 일자리 가점 지표의 평가 내용이 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세부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 경영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세부 지표인 안전 및 환경 지표의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배점은 직접적인 ‘사회적 가치 구현’(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 지표 외에도 관련 지표를 포함하면 더욱 확대된다. 조직·인사(삶의 질 구현 2점), 노사관계(2점)도 사회적 가치와 관련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요 사업 범주[공기업 45점, 준정부(위탁집행) 55점, 준정부(기금) 50점]의 비계량지표인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공기업 12점, 준정부기관 14점)는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의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사업 범주의 계량지표[공기업 24점, 준정부(위탁) 31점, 준정부(기금) 26점]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관련 안전·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 연관 지표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기관별 업종,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의 배점은 2020년에 공기업은 12점에서 17점, 준정부기업은 14점에서 19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표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세부 평가내용과 항목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평가내용 ¹⁾	계량평가항목 ¹⁾
	2018 (22)	2019 (24)		
일자리 창출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을 평가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 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안전 및 환경	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근로환경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실적을 평가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생산물 구매 기술개발생산물 구매 여성기업생산물 구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상품 구매 장애인생산물 구매 국가유공자생산물구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구매 재정조기집행
윤리경영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업무 효율 향상 실적을 평가 	

주: 1) 2018년 공기업 평가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108~2019;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2018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의 배점을 보면, 공 기업을 기준으로 2010년 2점에서 2011년 이후 7~9점을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 21점, 2018년 22점, 2019년부터는 24점으로 크게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삶의 질(2점), 노사관계(2점),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 적정성(17점)⁸⁾까지 포함한다면, 2020년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세부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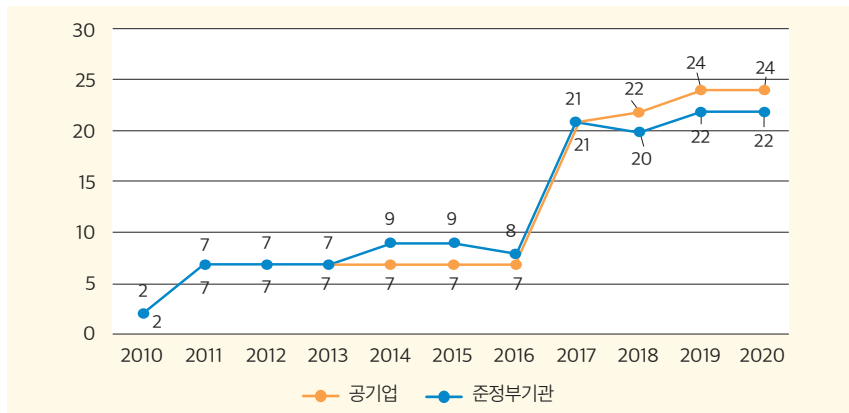
8) 2019년 12점에서 2020년 17점으로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평가항목의 구성과
배점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체 경영평가 총점 100점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는 공기업의 경우 45점까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의 배점¹⁾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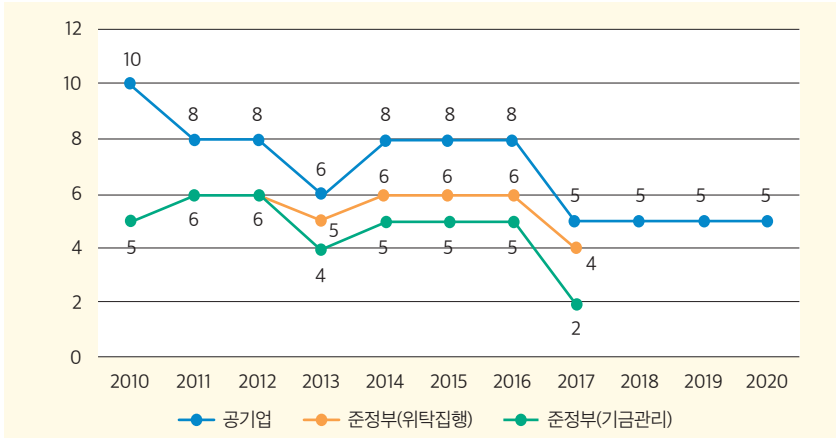


주: 1) 2018년과 2019년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만 포함하며, 2017년 이전에는 관련 지표(사회공헌, 사회적 책임, 정부권장정책 등)의 배점을 합산함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0~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기관의 업무 효율성 및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업무 효율성은 공기업의 경우 2010년 10점이 배점되었으나 2011년 8점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는 5점으로 감소하였다. 준정부기관은 2010년 5점에서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7년에는 각각 4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점(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감소하였고 2018년부터 경영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등으로 측정되는 업무 효율성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감소하였고 준정부기관에서는 더 이상 평가의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재무성과에 대한 배점은 2010년에는 10점이 배점되었으나 공기업 부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4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20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18점, 공기업은 17점으로 배점이 확대되었다. 이후 점차 배점이 감소하였는데 2017년부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7점, 공기업 5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2점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2]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된 업무 효율성 지표의 배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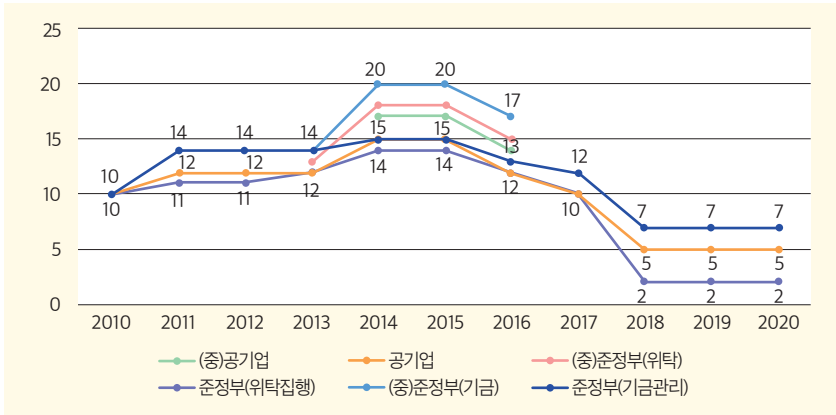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0~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의 배점이 확대되면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기관의 업무 효율성 및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은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된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

(단위: 점)



주: (중)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기관에 해당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0~2020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는 배점이 크게 확대된 반면, 효율성과 관련된 업무 효율성과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방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었던 경영평가로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성과는 공공부문 운영의 지향점에 대한 목표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추진에 소홀해졌다는 문제의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사회적 가치 추진의 성과와 한계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성과는 공공부문 운영의 지향점에 대한 목표를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이익 제고와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의 이익 추구를 상위 목표로 선정하였고, 이에 맞도록 기관의 목표와 과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 다른 성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 추진과 정부혁신,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조달의 과정에 사회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⁹⁾

구체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은 다음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증가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에 2만 908명이었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2만 2,195명, 2018년 3만 3,716명, 2019년 3만 3,447명으로 나타난다.

〈표 4〉 공공기관의 연도별 신규 채용¹⁾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2/4) ²⁾
전체	19,202	20,908	22,195	33,716	33,447	9,037
공기업	5,826	5,995	6,807	9,079	11,283	708
시장형	3,663	3,669	3,666	4,212	4,303	329
준시장형	2,164	2,325	3,141	4,867	6,980	379
준정부기관	4,956	6,137	6,929	9,923	9,228	2,072
기금관리형	989	1,112	1,790	2,672	1,651	273
위탁집행형	3,967	5,025	5,140	7,251	7,576	1,799
기타공공기관	8,420	8,777	8,458	14,714	12,937	6,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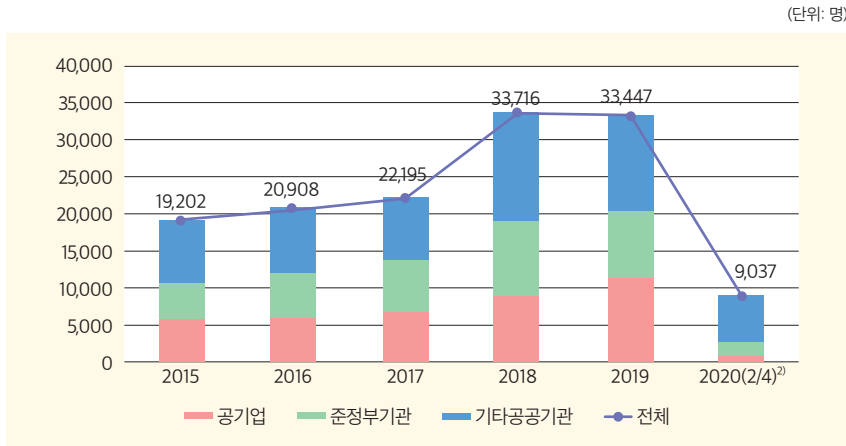
주: 1)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임원, 정규직(무기계약직 비포함)에 대한 채용 합계

2) 2020년은 2사분기까지의 자료임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statisticsStat3.do>, 검색일자: 2020. 8. 3.

9)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보도자료, 2020. 1. 15.

[그림 4]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¹⁾



주: 1)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임원, 정규직(무계약직 비포함)에 대한 채용 합계

2) 2020년은 2사분기까지의 자료임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추진 실적자료¹⁰⁾에 따르면 2017년 7월 이후 2020년 6월 말 기준 전체 공공부문에서 전환 결정 인원 19만 6,711명 중 18만 5,267명(94.2%)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334개 대상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현원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을 파악해보면, 총 전환 결정 인원 10만 3,903명 중에 9만 5,006명이 전환되어 91.4%의 전환이 완료된 상태이다. 채용방법별로 살펴보면, 7만 6,430명(80.4%)이 전환 채용되었으며, 1만 8,576명(19.6%)이 경쟁채용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전환방식은 직접채용(49.7%), 자회사 전환(48.8%), 제3섹터 고용방식(1.5%)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직접채용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의 안정화가 제고되었고 일자리 처우도 개선되었다.

셋째,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촉진되었다.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조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혁신제품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으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 환경 및 산업안전,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에서도 개선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공공기관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9명에서 2019년 3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는 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2017년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이익 제고와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의 이익 추구를 상위 목표로 선정하였고, 이에 맞도록 기관의 목표와 과제를 운영해야 한다.

10) 고용노동부,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 5천명」, 보도자료, 2020. 8. 2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의 안정화가
제고되었고 일자리
처우도 개선되었다.

<표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용방법별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대상 기관	전환 결정 인원	전환완료 인원		
			합계	전환채용	경쟁채용 ¹⁾
합계	853	196,711	185,267 (94.2)	156,062 (84.2)	29,205 (15.8)
중앙부처	49	23,239	23,451 (100.9)	22,000 (93.8)	1,451 (6.2)
자치단체	245	25,307	24,438 (96.6)	19,898 (81.4)	4,540 (18.6)
공공기관	334	103,903	95,006 (91.4)	76,430 (80.4)	18,576 (19.6)
지방공기업	149	6,532	6,049 (92.6)	4,776 (79.0)	1,273 (21.0)
교육기관	76	37,730	36,323 (96.3)	32,958 (90.7)	3,365 (9.3)

주: 1. 합계의 () 안은 전환 결정 인원 대비 비중이며, 전환채용과 경쟁채용의 () 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1)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함
 출처: 고용노동부,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 5천명』, 보도자료, 2020. 8. 27., p. 5

<표 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방식별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대상 기관	전환 결정 인원	전환완료 인원			
			합계	직접채용	사회사 전환	제3섹터 ¹⁾
합계	853	196,711	185,267 (94.2)	136,530 (73.7)	46,970 (25.3)	1,767 (1.0)
중앙부처	49	23,239	23,451 (100.9)	23,451 (100.0)	0 (0.0)	0 (0.0)
자치단체	245	25,307	24,438 (96.6)	24,438 (100.0)	0 (0.0)	0 (0.0)
공공기관	334	103,903	95,006 (91.4)	47,184 (49.7)	46,389 (48.8)	1,433 (1.5)
지방공기업	149	6,532	6,049 (92.6)	5,468 (90.4)	581 (9.6)	0 (0.0)
교육기관	76	37,730	36,323 (96.3)	35,989 (99.1)	0 (0.0)	334 (0.9)

주: 1. 합계의 () 안은 전환 결정 인원 대비 비중이며, 직접채용, 사회사 전환, 제3섹터의 () 안은 합계 대비 비중임
 1) 제3섹터 방식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고용된 경우임
 출처: 고용노동부,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 5천명』, 보도자료, 2020. 8. 27., p. 5

8.29에서 2019년 8.46으로 개선되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도 2017년 2.9%에서 2019년 3.2%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¹¹⁾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이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개념의 모호성이다.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왔던 사회공헌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의 차이점에 대한 많은 질문이 제기

1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보도자료, 2020. 7. 21.

되었다. 특히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기관에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사회적 가치가 기존의 사회적 책임(SR) 활동을 더 확대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공익성과 정부의 정책을 더욱 많이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경영평가 지표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질문의 답을 거꾸로 찾아보려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기존의 사회적 책임(SR) 활동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주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부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서도 주된 운영의 목표와 원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사업 수행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과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활용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을 단기간 내 급격히 진행하였는데,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사회적 가치 추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의 해임권고가 이루어지는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을 전환하고 사회적 가치 추진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추진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활동이 경영평가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3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 실적은 경영평가에서 요구하는 5개의 세부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위주로 동형화(isomorphism)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관심의 정도는 경영평가 지표의 배점에 비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¹²⁾ 일례로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가치의 측정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경영평가 대상 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며, 사회적 가치의 정량화 측정 분야도 경영평가의 계량평가 항목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을 단기간 내 급격히 추진하였고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12) 사회적가치연구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설문조사 결과」, 2020. 8.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의 해임권고가
이루어지는 매우 강력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추진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적 가치 측정결과는 경영평가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가치 활동은 상대적으로 그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내부적 필요와 동기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능력과 창조력을 장려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각기 다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 이슈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활동의 결과가 예상 외의 부정적 영향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일자리 창출 노력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증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시켰고, 이로 인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긍정적 성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기관의 재정여건과 사업 계획,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장기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신규 채용의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미래의 수요를 현재에 집행한 형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자회사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 역시 크게 증가되었다. 더불어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도 크게 늘어났는데,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 특성상 이러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예산 활용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¹³⁾

<표 7> 공공기관 임직원 수 추이(201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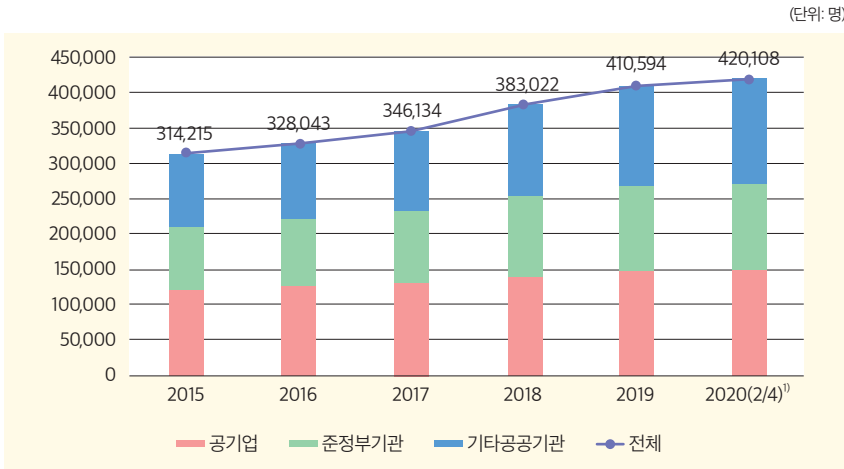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4)	증가인원	증가율
전체	314,215	328,043	346,134	383,022	410,594	420,108	105,893	33.7
공기업	122,444	126,931	132,590	139,857	147,113	149,015	26,571	21.7
시장형	57,151	59,883	62,094	64,127	65,766	66,285	9,134	16.0
준시장형	65,293	67,048	70,496	75,730	81,347	82,731	17,438	26.7
준정부기관	88,611	93,698	100,669	114,154	120,788	123,317	34,706	39.2
기관관리형	21,606	22,517	24,493	28,280	29,365	29,744	8,138	37.7
위탁집행형	67,005	71,181	76,176	85,874	91,423	93,573	26,568	39.7
기타공공기관	103,160	107,414	112,876	129,010	142,694	147,776	44,616	43.2
증가율	-	11.3	14.3	27.8	19.7	6.5	-	-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3) 공공기관의 인력 증가와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의 증가에 대해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시사저널』, 『공공기관, 인건비 부담 놓고 당기순이익은 줄고』, 2020. 9. 14.,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482> 검색일자: 2020. 9. 16.; 『서울신문』, 『공공기관 정원 2년새 10%↑...을 임금부담 두자릿수 급증』, 2019. 3. 17., <https://www.seodaily.com/NewsView/1VGMI3IWAC>, 검색일자: 2020. 9. 1).

[그림 5] 공공기관 임직원 수(정원)



주: 1) 2020년은 2사분기까지의 자료임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또 한 가지 사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전환방식과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공공부문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전환 채용 대 경쟁 채용방식의 선정, 직접고용 대 자회사 채용 등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었다. 한편, 공공기관 구직자에게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신규 일자리의 축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며, 채용방법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과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이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비계량지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24점¹⁴⁾ 중 17점이 비계량 지표(71%)에 해당하며 관련 지표인 조직인사의 삶의 질(2점), 노사관계(2점), 주요 사업의 성과관리 적정성 지표(17점) 역시 모두 비계량 지표이다. 비계량 지표는 계량지표에 담지 못하는 성과와 노력을 폭넓게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사회사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 역시 크게 증가되었다.

14) 2020년 공기업 평가 기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전환방식과
채용방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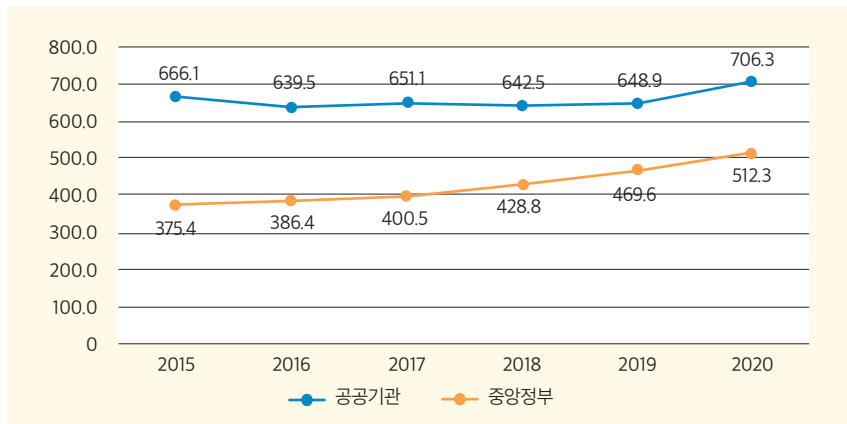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가진다. 평가의 자의성은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떨어뜨리고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수용성을 낮추며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 평가자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투입, 산출, 결과,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짧은 평가기간 내에 엄밀하게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다섯 번째 이슈는 경영평가를 포함한 공공기관 관리정책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줄어든 분야에 대한 관리이다. 특히 경영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리는 경영평가에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지표 자체가 사라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 공공기관의 재무성이나 효율성의 관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들이 제시되고 있다.¹⁵⁾

전체 공공기관의 예산은 정부 예산보다 크다. 2020년 예산은 정부가 512.3조원이지만 공공기관은 706.3조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제활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도 공공기관 운영에서 중요한 이슈에 해당한다.

[그림 6] 정부 예산과 공공기관 예산(2015~2020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규모는 2015년 504.7조원에서 2017년 495.2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9년에는 525.1조원에 이르렀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7년 이후 큰 변동은 없으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6년 157.8%에

15) 정도진 「공공기관 '퍼주기' 사회적 가치경영 없애려면」, 『파이낸셜뉴스』, 2020. 2. 12; 『매일경제』, 「공공기관에 두 번의 면죄부」, 재무상태 악화 불렀다」, 2019. 3. 1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85092/>, 검색일자: 2020. 9. 1.; 국회예산정책처, 『2019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2020; 허진욱·황순주,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 공기업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8.

<표 8> 공공기관의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부채규모	504.7	500.4	495.2	503.7	525.1
	부채비율	182.6	167.2	157.3	155.2	156.3
공기업	부채규모	365.3	363.0	364.1	371.2	388.1
	부채비율	192.0	181.5	177.6	178.3	182.9
시장형	부채규모	172.7	169.7	172.2	180.4	196.2
	부채비율	167.0	157.8	162.8	175.8	196.1
준시장형	부채규모	192.6	193.3	191.9	190.8	191.9
	부채비율	221.8	209.1	193.5	180.8	171.2
준정부기관	부채규모	125.4	123.4	117.6	117.7	119.7
	부채비율	184.5	157.7	134.6	131.4	124.9
기금관리형	부채규모	69.7	67.1	60.9	57.8	57.8
	부채비율	194.6	153.1	116.6	99.5	85.4
위탁집행형	부채규모	55.7	56.3	56.8	59.8	61.9
	부채비율	173.3	163.5	161.3	190.2	219.9
기타 공공기관	부채규모	13.9	14.0	13.5	14.9	17.3
	부채비율	76.8	66.7	59.9	55.3	62.1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서 2019년 196.1%로 크게 증가하였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도 2017년 161.3%에서 2019년 219.9%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감소하였다.¹⁶⁾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5조원에서 2019년 0.6조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당기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2015년 8.8조원에서 2019년 △1.5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은 2015년 5.7조원의 당기순이익에서 2019년 △3.1조원의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제활동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도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이슈에
해당한다.

16) 국회예산정책처(2020)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3년 이후 하락하다가 공공기관 총부채규모 및 부채비율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 전망(2020~2024년)은
2019년에 작성된
이전 연도(2019~2023년)
중장기 전망과
비교했을 때
부채비율의 수준이
더 증가했다.

<표 9>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

(단위: 조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2.5	15.4	7.2	0.7	0.6
공기업	4.9	9.0	4.2	2.0	1.4
시장형	8.8	6.3	1.0	△1.1	△1.5
준시장형	△3.9	2.8	3.2	3.1	2.9
준정부기관	7.9	6.4	3.2	△1.0	△0.7
기금관리형	2.2	3.1	2.4	2.7	2.5
위탁집행형	5.7	3.3	0.8	△3.7	△3.1
기타공공기관	△0.3	0.0	△0.1	△0.3	△0.2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표 10>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39개 공공기관의 2020~2024년 재무 전망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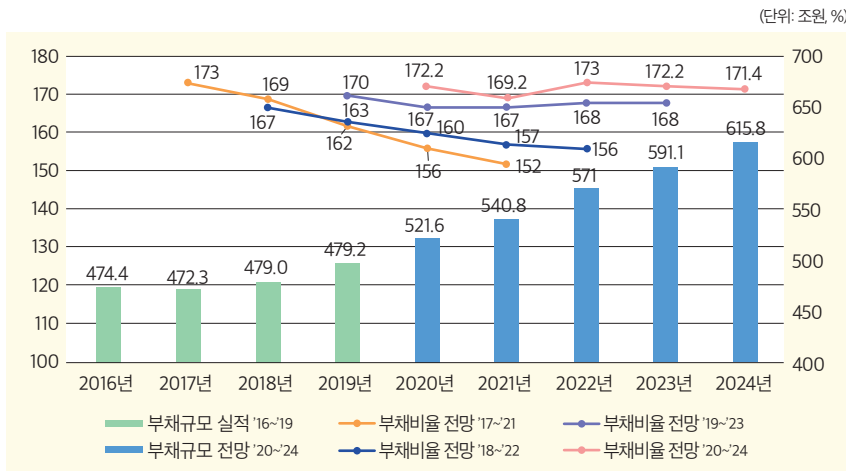
구분	2019년 (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산	794.6	824.5	860.4	901	934.2	975.1
부채	497.2	521.6	540.8	571	591.1	615.8
자본	297.5	302.9	319.6	330	343.2	359.3
부채비율	167.1	172.2	169.2	173	172.2	171.4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0. 9. 1, p. 2

공공기관의 향후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살펴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497.2조 원에서 2024년 615.8조원까지 118.6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채비율은 2019년 167.1%에서 2020년 172.2%로 5.1%p가 증가하지만 이후 안정화되어 2024년에는 171.4%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 기준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 전망(2020~2024년)은 2019년에 작성된 이전 연도(2019~2023년) 중장기 전망과 비교했을 때 부채비율의 수준이 더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중장기 재무전망(2017~2021년) 이후 매년 공공기관 재무전망상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주: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39개 공공기관의 자료임
출처: 기획재정부,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0. 9. 1.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 재무 현황과 전망은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부채비율은 2021년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기관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경제회복을 위해 증가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 이후 재무성과는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성과의 변화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엄밀하게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효율성과 재무성과의 배점은 줄었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배점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사업과 자원배분의 우선도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기관의 본업과는 부수적인 사회적 책임(SR) 활동으로 한정된다면, 사회적 가치 추진과 관련된 비용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도 적용되고,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국정과제의 수행 혹은 공공요금 규제와 관련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커진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재무성과의 변화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인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엄밀하게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변동은 사회적 가치 추진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인한 재무성과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범위와 그 규모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은 공공기관이 본래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의 수립과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반면, 경영평가를 통한 그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2017년 사회적 가치 추진이 본격 도입된 이후 사회적 가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평가체제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사회적 가치 추진으로 인한 성과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추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활용하다 보니, 사회적 가치 활동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한 의도로 도입된 정책들이라 할지라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기인력운영계획, 인력 재배치, 외부 조직진단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무성과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¹⁷⁾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문제가 가시화되면 오히려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부담이 결국에는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 보도자료, 2020. 6. 8.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보도자료, 2020.1.15.
- 고용노동부, 「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 5천 명」, 보도자료, 2020. 8. 27.
- 국회예산정책처, 『2019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2020.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2010~2020 각 연도.
- _____,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 2018~2019 각 연도.
- _____,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 _____,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_____,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9. 9. 2.
- _____, 「'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0. 9. 1.
- _____,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보도자료, 2020. 7. 21.
- _____,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 보도자료, 2020. 6. 8.
- 사회적가치연구원,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측정 설문조사 결과」, 2020. 8.
- 정도진, 「공공기관 '폐주기' 사회적 가치경영 없애려면」, 『파이낸셜뉴스』, 2020. 2. 12,
<https://www.fnnews.com/news/202002121703587709>, 검색일자: 2020. 8. 12
- 허진욱·황순주,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연구: 공기업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8.
- 『매일경제』, 「공공기관에 두 번의 '면죄부'.. 재무상태 악화 불렀다」, 2019. 3. 17,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85092>, 검색일자: 2020. 9. 1.
- 『서울신문』, 「공공기관 정원 2년새 10%↑...울 임금부담 두자릿수 급증」, 2019. 3. 17.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MJ3IWAC>, 검색일자: 2020. 9. 1.
- 『시사저널e』, 「공공기관, 인건비 부담 늘고 당기순이익은 줄고」, 2020. 9. 14.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482>, 검색일자: 2020. 9. 16.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검색일자: 2020. 8. 3.
- _____,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http://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자: 2020. 8. 3.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cheung@kipf.re.kr)

중고차 시장의 특징과 부가가치세 문제¹⁾

I. 서론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중고차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대수가 신차(新車)로 거래되는 자동차 대수보다 많다. 2018년에 중고차는 약 250만대 정도 거래되었는데, 신차는 이보다 적은 약 180만대 정도 거래되었다.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문제와 함께 세원 파악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중고차 사업자들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세 부담이 발생하여 결국 중고차 최종 소비자의 구매가격을 인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은 과세사업자가 개인, 면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매입할 때 판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중고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²⁾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고차 사업자들이 중고차를 개인에게서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정확한 중고차 매입가격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중고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사업소득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중고차 사업자 이외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중고차 매매딜러가 중고차 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이들 중고차 매매딜러의 소득 등도 파악하기 어려워 이

1) 본고는 하세정·정재호·송헌재,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XII)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의 일부 내용을 『재정포럼』의 목적에 맞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로 인한 탈세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고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과 중고차 시장이 가지는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중고차 부가가치세 과세

1.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변천

중고차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4년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품 가운데 고가로서 재활용이 가장 필요한 품목으로 중고차를 특례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여겨진다.

제도 도입 당시 중고차의 공제율은 10/110이었으나 이후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 등으로 몇 차례 공제율이 변경되었다. 2002년에는 공제율을 8/108로 낮추었고, 2004년 10월 이후에는 10/110으로 다시 상향하였다가 이후 9/109 혹은 10/110의 공제율을 적용하였다. 2017년 7월부터는 중고차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10/11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표 1> 중고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요율 변화

연도	공제율
1994	10/110
2002	8/108
2004. 10.	10/110
2010	9/109
2018	10/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자: 2020. 2. 11.

본고에서는
중고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과 중고차
시장이 가지는
독특한 사업구조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중고차에는 신차를
구매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잔존하며, 신차가격 대비
자동차 잔존가치의
비율만큼 전 단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중고차의 부가가치세 문제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차량금액과 함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부가가치세는 자동차의 내구연한 동안에 자동차 가치의 하락분(감가상각분)만큼 소비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고차에는 최초 신차를 구매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매입세액과 동일한 금액)이 잔존하며, 신차가격 대비 자동차 잔존가치(중고차 가격)의 비율만큼 이전 단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고차 구입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고차가 ‘자동차’라는 본래의 수송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을 경우 이미 신차를 구매할 때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이 중복 부과되어 해당 중고차 구매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중고차 거래와 매입세액

앞서 설명한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 A가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³⁾ 소비자 A는 차량가격 1천만원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세율 10%)가 100만원인 신차를 구매했다. A는 이 신차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110만원에 중고차 중개업자 B에게 매각하였다. 중고차 매각금액 110만원에는 차량 잔존가액 1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개업자 B는 해당 중고차를 수리하여 200만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최종소비자 C에게 재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소비자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사례 1) 중개업자 B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 B의 매입액은 1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중개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만원(수리비)과 합하여 중개업자 B의 매출액은 3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중개업자 B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30만원에서 매입세액 10만원을 공제한 20만원이 된다. 그리고 최종소비자 C가 지불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30만원을 포함한 330만원이 된다. 한편, 이 경우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신차 거래 시 거둬들인 100만원과 중고차 거래 시 거둬들인

3) 본 예시는 박병호(2010), pp. 34~38에서 제시된 예시를 저자가 재구성하였다.

20만원의 합인 120만원이 된다.

다음은 소비자 A가 개인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중개업자 B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례 2)를 살펴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업자 B의 매입액은 110만원이 되고, 따라서 중개업자 B의 매출액은 310만원이다. 그리고 최종소비자 C가 지불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31만원을 포함한 341만원이 된다. 사례 2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사례 1에 비해 소비자 A가 신차를 구매할 때 납부한 세금에 다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례 1에서는 국가가 징수한 세금이 120만원이었지만, 사례 2에서는 신차 구입 시 거둬들인 100만원과 중고차 판매 시 거둬들인 31만원을 합한 131만원이 된다.

본 예시에서 창출된 총 경제적 부가가치는 신차의 부가가치 1천만원과 중개업자 B의 자동차 수리로 인한 부가가치 200만원의 합인 1,200만원이 된다. 따라서 국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120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고차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입함으로써 131만원의 세금이 징수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표 2> 중고차 거래(사례 1과 사례 2)

(단위: 만원)

거래 단계	매입액	부가 가치	매출액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납부 세액	공급 대가	세부담 및 세수
(사례 1)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서 B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A	-	100	-	10	-	-	110	A = 90 B = 0 C = 30 국가 = 120
B	100	200	300	30	10	20	330	
계	-	300	-	-	-	20	-	
(사례 2)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A	-	-	-	-	-	-	110	A = 90 B = 0 C = 41 국가 = 131
B	110	200	310	31	-	31	341	
계	-	300	-	-	-	31	-	

주: 국가의 세수입은 A가 처음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한 세금인 100만원을 포함함
출처: 박명호(2010), p. 36 <표 2>를 저자가 재구성

중고차가 '자동차'라는 본래의 수송 기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미 신차를 구매할 때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이 중복 부과되어 해당 중고차 구매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중고차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국민경제의 자원절감, 환경보호 등을 지향한다

4.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

이번에는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사례 3)를 살펴보자. 개인 소비자인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개업자 B의 매입액은 110만원이 되고, 매출액은 310만원이 된다. 그리고 최종소비자 C가 지불하는 공급대가는 310만원과 부가가치세 31만원을 포함한 총 341만원으로 C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은 41만원이 되어 앞의 사례 2와 동일하다.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방식이 도입되면, 중개업자 B는 간주매입세액으로 10만원($=110\text{만원} \times \frac{10}{110}$)을 공제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징수하는 총세금은 121만원이 된다.

<표 3> 중고차 거래(사례 3)

(단위: 만원)

(사례 3) 매입세액 공제방식(적용비율 10/110)을 도입한 경우								세부담 및 세수
거래 단계	매입액	부가 가치	매출액	매출 세액	매입 세액	납부 세액	공급 대가	
A	-	-	-	-	-	-	110	A = 90 B = -10 C = 41 국가 = 121
B	100	200	310	31	10	21	341	
계	-	300	-	-	-	21	-	

주: 국가의 세수입은 A가 처음 자동차를 살 때 부담한 세금인 100만원을 포함함
출처: 박명호(2010), p. 38 <표 3>을 저자가 재구성

5.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의의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운용하는 주된 목적은 중고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가격 인하를 통해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국민경제의 자원 절감,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자동차의 처분 및 교환이 어려워져 신차 대체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신차 대체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중고차 거래 활성화는 신차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줌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며, 넓은 의미에서 중고차 거래 활성화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절약을 도모하여 국가자원 및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내구재의 경우 대체로 위와 같은 특성 및 문제점

이 있음에도 중고차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로는, 우선 중고차는 중고품 중에서 고가로서 재활용의 필요성이 크고, 정부에서 자동차의 소유권 변경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어 국가가 소유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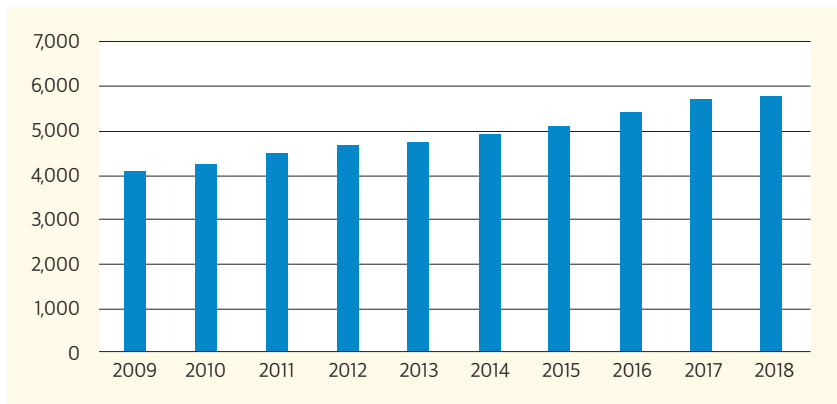
III. 중고차 거래 시장 규모

1. 중고차 사업자 현황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사업자 수는 2008년 이전에는 약 4천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5,800명으로 증가했다.

[그림 1] 중고차 사업자 수

(단위: 명)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관리사업자업체현황분기」,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437&hFormId=4392&hSelectId=4392&sStyleNum=855&sStart=201903&sEnd=201903&hPoint=00&hAppr=1>, 검색일자: 2020. 2. 10.

2. 중고차 거래규모

중고차 거래규모는 중고차 이전등록 건수를 이용해 살펴볼 수 있다. 중고차 이전등록 건수(증여·상속 등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 건수는 제외)는 2018년에 당

중고차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로는 우선 중고차는 재활용의 필요성이 크고, 국가가 소유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건수가 곧 중고차 거래 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 거래에서 동일한 중고차는 두 번의 이전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자 개인 간 이전등록이 약 136만건, 사업자에 의한 이전등록 건수는 약 234만건으로 전체 약 370만건이었다.

<표 4> 유형별 자동차 이전등록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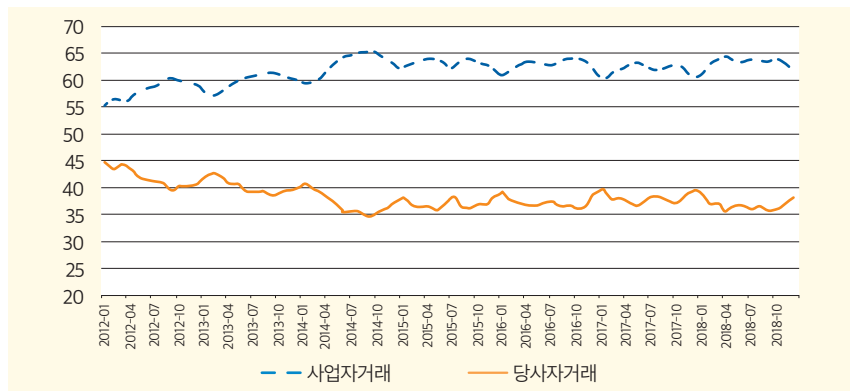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사자거래	1,348,524	1,331,478	1,259,750	1,329,022	1,374,418	1,389,461	1,357,753
사업자거래	1,872,332	1,976,643	2,141,356	2,262,373	2,327,737	2,269,426	2,335,818
합계	3,220,856	3,308,121	3,401,106	3,591,395	3,702,155	3,658,887	3,693,571

주: 증여, 상속 등에 의한 이전등록 건수는 제외한 수치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r=1>, 검색일자: 2020. 2. 10.

[그림 2] 자동차 이전등록의 유형별 비중 변화(건수 기준)

(단위: %)



주: 증여, 상속 등에 의한 이전등록 건수는 제외하고 비중을 산출함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r=1>, 검색일자: 2020. 2. 10.

그러나 중고차 거래 건수가 곧 중고차 거래 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사업자 거래에서 동일한 중고차는 두 번의 이전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 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A의 중고차를 B가 구매해서 이전등록을 하면 한 대의 중고차가 한 번의 이전등록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면, 사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에서는 A가 자신의 중고차를 중고차 거래 사업자에게 판매하고(A의 중고차를 사업자에게로 이전등록), 사업자는 이 중고차를 B에게 판매하면서

다시 이전등록을 하게 된다(사업자에서 B로 이전등록). 따라서 예를 들어 사업자 거래에서 중고차 이전등록 건수가 200만건이라면, 거래 대상인 중고차 대수는 100만대가 된다. 이를 감안하여 중고차 거래 건수가 아닌 중고차 거래 대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당사자 개인 간 거래 대수가 사업자를 통한 거래 대수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에 사업자를 통해 거래된 중고차는 약 117만대인데, 개인 당사자 간 거래 대수는 이보다 약간 많은 약 136만대이다. 결과적으로 거래 건수는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개인 당사자 간 거래보다 많으나, 거래된 중고차 대수는 개인 당사자 간 거래 대수가 사업자를 통한 거래 대수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고차 거래 건수는
사업자를 통한 거래가
개인 당사자 간
거래보다 많으나,
거래된 중고차 대수는
반대로 개인 당사자 간
거래 대수가
사업자를 통한 거래
대수보다 많다.**

<표 5> 유형별 자동차 이전등록 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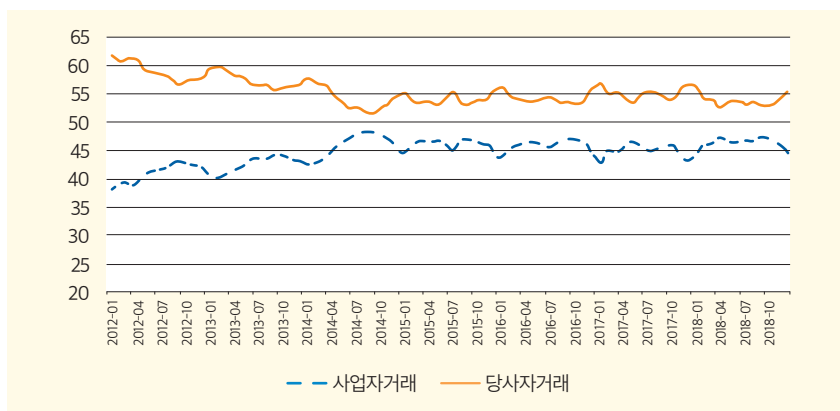
(단위: 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사자거래	1,348,524	1,331,478	1,259,750	1,329,022	1,374,418	1,389,461	1,357,753
사업자거래	936,166	988,322	1,070,678	1,131,187	1,163,869	1,134,713	1,167,909
합계	2,284,690	2,319,800	2,330,428	2,460,209	2,538,287	2,524,174	2,525,662

주: 이전등록 대수는 당사자거래 이전등록 건수와 사업자거래 이전등록 건수의 절반 값을 합하여 산출함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r=1>, 검색일자: 2020. 2. 10.

[그림 3] 자동차 이전등록의 유형별 비중 변화(대수 기준)

(단위: %)



주: 당사자거래 이전등록 건수와 사업자거래 이전등록 건수의 절반 값을 합하여 산출한 이전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산출함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r=1>, 검색일자: 2020. 2. 10.

개인 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는 중개수수료 등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자와 매매자 연결, 중고차 이전신고에 대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개인 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는 중개수수료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자와 매매자 연결, 중고차 이전신고에 대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업계에서는 개인 당사자 간 거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거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중고차 사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들은 자동차 이전신고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장 거래를 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3. 신차 거래규모

신차는 연간 약 180만대가 거래되고 있다. 이 중 국산 신차 거래는 약 150만대로 2012년 약 140만대에서 2015년 약 155만대까지 증가한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차 거래규모는 2012년 약 14만대에서 2018년 약 30만대에 육박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신차 거래규모에서 국산 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약 83.5%이며, 수입차는 약 1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자동차 취득세 납부 건수 추이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차	1,403,656	1,386,889	1,448,127	1,553,647	1,562,136	1,569,063	1,538,325 (83.5)
수입차	139,181	166,209	223,174	288,272	268,934	268,694	297,640 (16.2)
부활차	5,652	5,310	4,746	5,183	4,779	7,572	6,620 (0.4)
합계	1,548,489	1,558,408	1,676,047	1,847,102	1,835,849	1,845,329	1,842,585 (100.0)

주: 1. 부활차는 택시, 렌터카 등 특수목적 차량을 정비해 되파는 차량임
2. () 안은 비중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r=1>, 검색일자: 2020. 5. 26.

신차는 연간 약 180만대가 거래되는 데 비해 중고차는 연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있어 신차보다 중고차 시장의 거래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취득세 납부자료를 이용해 신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을 비교해 보아도 2018년 기준 신차는 약 172만대, 중고차는 약 215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 거래규모와 자동차 취득세 납부자료의 거래규모가 차이 나는 것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차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단위: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 (신차)	1,409,177	1,377,081	1,482,508	1,671,804	1,675,030	1,701,742	1,721,859
이전 (중고차)	1,848,626	1,898,958	1,900,530	2,029,939	2,086,242	2,144,141	2,148,590

주: 상속, 기타 건수 및 세액은 제외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012~2018 각 연도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고차
매매딜러가 참여하는
형태로 중고차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IV. 중고차 거래시장의 특징

1. 중고차 매매 방식 및 특징

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시시설 면적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⁴⁾을 등록하려면 매매업자 1인당 660㎡ 이상의 전시시설이 있어야 하고, 이 전시시설은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고차 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해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고차 매매딜러가 참여하는 형태의 중고차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중고차 매매상사는 상사 대표의 개인사업자 회사로 이 상사 대표가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하여 중고차 매매사업을 운영한다. 일부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법인 사업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 지분 혹은 가족 명의 지분으로 이루어진 개인 사업체이다. 그리고 중고차 매매상사의 상사 대표가 직접 중고차를

4) 우리나라에서 신차는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매매업은 모두 중고차 매매업을 의미한다.

**중고차 매매상사의
상사 대표가 직접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차 매매딜러와
공동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차 매매딜러(매매사원)와 공동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매매상사 대표와 중고차 매매딜러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고정적인 급여 등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지 상사 대표가 제휴 중고차 딜러들에게 매매상사(대표)의 명의로 중고차를 사고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매매사업 전시장과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소정의 비용을 받는 구조이다. 각 중고차 매매딜러들은 독립적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매매상사 대표에게 중고차 매입자금 융통⁵⁾(상사대표 보증)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상환,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만, K Car, 엔카 등 일부 기업형 사업자들은 매매딜러가 아닌 정식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을 통해 중고차 영업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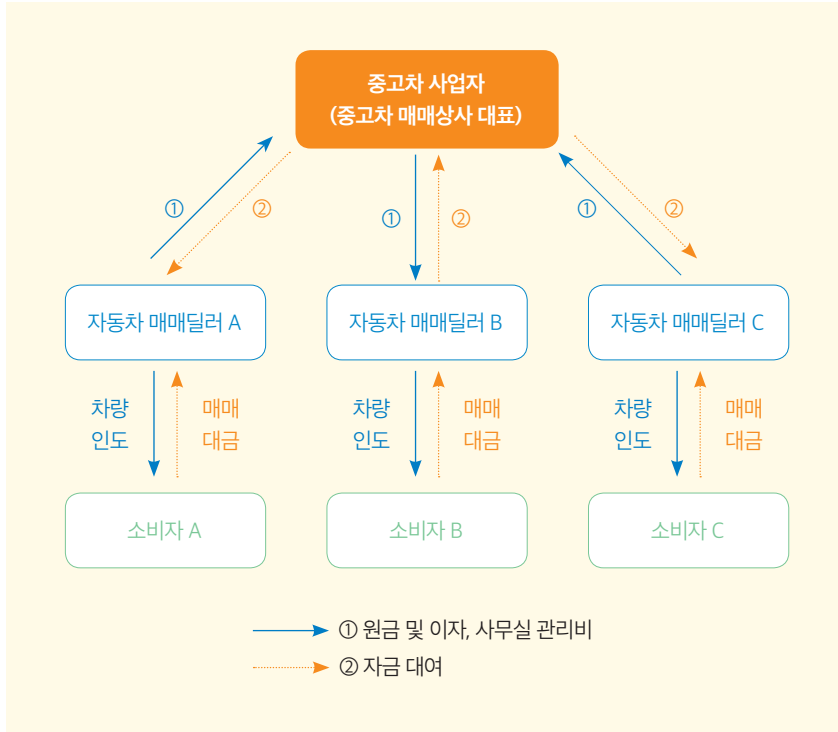
<표 8> 서울특별시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전시시설 구조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
정비·성능점검 시설	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
출구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14433#AJAX>, 검색일자: 2020. 6. 11.

5) 매매상사 대표만이 중고차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매상사 대표가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 딜러에게 중고차 매입자금을 융통해 주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는 구조이다.

[그림 4] 중고차 사업형태



출처: 전병목·류덕현(2016), p. 81 [그림 III-5]를 재구성

현재 중고차 거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 사업자보다는 중고차 매매딜러들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 실제 중고차 딜러가 독립적으로 중고차 매입과 매출 담당하고 있지만 중고차 딜러는 중고차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 명의는 중고차 사업자인 소속 매매상사 대표로 이루어지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극단적으로 중고차 사업자인 매매상사 대표가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얼마나 판매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무실 사용료 등의 비용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중고차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중고차 딜러의 소득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거래 명의자인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의 소득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의무 발급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의 매출이 드러나게 되고,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에게 원천징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중고차 거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 사업자보다는 중고차 매매딜러들을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

중고차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또 다른 탈세 사례로 중고차 사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당사자 간 거래로 위장하여 사업자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중고차 거래 관련 탈세유형

다른 거래들도 마찬가지로지만 중고차 거래에서 흔한 탈세방법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과 매출액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중고차를 법인으로부터 구입하면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정확한 중고차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고차를 대부분 개인으로부터 구매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고차 매입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고차 매출가격도 낮춰 신고할 수 있다. 중고차 매출가격을 낮춰서 탈세하는 방법은 중고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면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 혹은 중고차 매매딜러들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 역시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수취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7%인 취득세 절감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중고차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탈세에 공모하게 될 수 있다. 즉 항상 소비자와 공모해야만 탈세가 가능하다. 여기에 과표(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중고차 거래가격을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아무런 증빙 없이 중고차 이전등록을 해주고 있어 매출 축소가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증빙이 어려운 개인(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와의 형평성을 위해 사업자 거래에서도 일정 기준(적정 과표)만 넘으면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고차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또 다른 탈세 사례로, 중고차 사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당사자 간 거래로 위장하여 사업자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여전히 개인 당사자 간 거래가 사업자를 통한 중고차 거래보다 많은데, 업계에서는 당사자 거래의 일부는 위장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이전신고에 대한 법률 지식이 미비하고 금액이 고가이면서 품질 차이가 큰 중고차는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장 당사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매도자가 중고차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⁶⁾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중고차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이전신고를 위해 중고차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나중에 요청하겠다고 하고 추후 매수자가 결정되면 매도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중고차 딜러가 매도자

6) 인감실명제 제도는 대포차 차단, 위장 당사자 거래의 차단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포차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에게 위와 같이 해야 중고차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설득해서 추후 중고차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인감증명서를 받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고차 딜러가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원차주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한 것처럼 신고하여 탈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개인 간 위장 거래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동의하고, 추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항상 소비자와 공모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V. 제도개선 방안

중고차가 '자동차'라는 본래의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없을 경우 최종 소비자(중고차 구매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혹은 9/109로 낮춰서 적용한 적도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도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8/108 혹은 9/109로 낮춰서 적용하는 것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원리에 따라 10/110 공제율을 적용하면서 탈세로 인한 문제는 다른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1.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2017년부터 중고차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자동차 매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고객의 발급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10만원 미만인 중고차가 없기 때문에 모든 중고차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후 적발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10만원 이상인 모든 중고차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후 적발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중고차 매출에 대해
중고차 매매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은
매매상사 소속 중고차
매매딜러들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중고차 매출에 대해 중고차 매매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은 매매상사 소속 중고차 매매딜러들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중고차 매출가격이 이전에 비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과태료 등의 제재수단이 있어 저가 신고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중고차 매출이 투명해지면 부수적으로 매입비용의 투명성도 일부 제고된다. 매입액을 낮출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입가격 저가 신고에 따른 탈세 유인이 감소하게 되며, 중고차 거래 관련 각종 증빙서류 수수, 현금의 송금방법 개선 등으로 매입 거래금액을 관리하게 된다.

중고차 취득세 납부자료를 보면, 2018년의 경우 중고차 취득세 납부 건수가 2017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한 대당 취득세 납부액은 약 12.5% 증가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특별히 고가의 중고차 거래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해 저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9> 자동차 취득세 납부 건수 및 세액 추이

(단위: 건, 백만원, 천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	건수	1,409,177	1,377,081	1,482,508	1,671,804	1,675,030	1,701,742	1,721,859
	세액	2,164,226	2,098,416	2,410,679	2,864,301	2,962,673	2,963,788	3,123,786
	대당 세액	1,536	1,524	1,626	1,713	1,769	1,742	1,814
	증감률	-	-0.8	6.7	5.4	3.2	-1.5	4.2
이전	건수	1,848,626	1,898,958	1,900,530	2,029,939	2,086,242	2,144,141	2,148,590
	세액	656,096	821,547	825,949	909,692	1,001,666	1,102,030	1,242,380
	대당 세액	355	433	435	448	480	514	578
	증감률	-	21.9	0.5	3.1	7.1	7.0	12.5

주: 상속, 기타 건수 및 세액은 제외함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012~2018 각 연도

또한 윤상호·신미정(2019)에서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중고차 취득세 납부 관련 지자체 자료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전후의 평균 취득세 신고가액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이후 평균 취득세

7) 2012년 이후 자동차 취득세율은 변화가 없었다.

신고가액이 상승했고,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높은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전후 중고차 취득세 신고가액의 평균값 및 중위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가 전체 약 27.7%에서 약 41.4%로 상승하였다.

<표 10> 현금영수증 의무화 전후 중고차 취득세 신고가액 비교

(단위: 건, 원)

구분	표본 수	평균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시행 전	1227,579	5,941,046	2,700,000	0	518,181,824
시행 후	1,018,306	7,178,103	3,700,000	0	550,000,000

출처: 윤상호·신미정(2019), p. 56 <표 III-7>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표 11> 현금영수증 의무화 전후 중고차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

(단위: 건, 원, %)

구분	표본 수	신고가액 = 0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 시가표준액
시행 전	1227,579	164,929	881,121	7,035	339,423
	100.0	18.7	71.8	0.6	27.7
시행 후	1,018,306	133,333	591,255	5,793	421,258
	100.0	22.6	58.1	0.6	41.4

출처: 윤상호·신미정(2019), p. 58 <표 III-8>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예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도 소비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을 낮춰서 탈세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고차 구매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는 것보다 취득세 절감분이 더 크기 때문에 중고차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중고차 구매자들이 탈세에 공모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이런 탈세는 소비자가 동의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입금기록과 현금영수증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2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등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는 주택 다음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현금거래보다는 통장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제도와 함께 추가적으로 중고차 매매딜러들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예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도
소비자와 공모해서
매출액을 낮춰서
탈세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대포차를 차단하고 위장 당사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매도자는 중고차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제도(인감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 사업자 통장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하여 매입액 및 매출액이 확인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자 통장을 이용하면 과세 제도권 안에서 향후 세무조사 가능성 등으로 인해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2. 위장 당사자 거래 방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도를 실시해도 소비자가 공모하면 위장 당사자 거래를 통한 탈세는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위장 당사자 거래는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대포차를 차단하고 위장 당사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매도자는 중고차 매수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제도(인감실명제도)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감실명제도가 시행된 2014년에만 당사자 간 중고차 거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로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감실명제도는 위장 당사자 거래를 방지하는 데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 개인 당사자 간 자동차 이전등록 대수

(단위: 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348,524	1,331,478	1,259,750	1,329,022	1,374,418	1,389,461	1,357,753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r=1>, 검색일자: 2020. 2. 10.

위장 당사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들이 제출된 적이 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자동차 매매업자가 양수한 중고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위장 당사자 거래를 방지하려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중고차 매매딜러가 위장 당사자 거래를 한 경우에, 위법 행위를 한 중고차 매매딜러는 처벌하지 못하고 사업자인 중고차 매매상사 대표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위반한 사람과 처벌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와 양도하는 자가 직접 매매한 경우 거

8)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2014년 1월부터 대포차 차단, 위장 당사자 거래의 차단 등을 위해 중고차 거래 시 인감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은 개인 당사자 간 거래에서 은행 입금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의 위장 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딜러의 위장 당사자 거래에서 딜러 자신이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 당사자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소수의 위장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개인 간 거래를 제약하면서 서류 첨부 등에 따른 행정비용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두 법안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 중 두 번째 법안을 완화하여 당사자 거래로 신고할 경우 거래대금 지불 증빙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과세 관청이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 당사자 거래에 대한 거래 자율성과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전에 거래대금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닷지효과를 통해 위장거래를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중고차 시장의 사업방식

탈세 등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중고차 거래에서 실질과 명의가 다른 이중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딜러는 실제 자신이 직접 매입과 매출을 하고 있지만, 중고차 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없고 중고차 사업자가 아니어서, 결국 거래 명의를 소속 매매상사(대표)로 할 수밖에 없다. 중고차 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모든 자동차 매매딜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중고차 매매딜러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과도 차이가 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계약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대부분 본사가 얼마만큼의 보험을 모집하고 택배물량이 배달되는 등의 실적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고차 사업자는 중고차 매매딜러의 중고차 매입 및 매매 실적을 알기 어렵다. 근래 현금영수증제도로 중고차 사업자가 중고차 매매딜러의 매매금액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고차 딜러는 특수고용직과는 차이가 있다.

중고차 매매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서 알선 사업자 등록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면 어떨까 한다. 중고차 매매딜러는 중고차 사업자가 아니

**탈세 등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중고차
거래에서 실질과
명이가 다른
이중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서
알선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권 안에서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면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고차 매매딜러를 중고차 사업자와 연계된 사업자로서 알선 사업자
등록 등을 하고 사업자로서 사업자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권 안에서 중
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KIPF**

<참고문헌>

박명호, 「중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통권
제171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 9., pp. 28~41.

윤상호·신미정, 『현금영수증 발행과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 한국지방
세연구원, 2019. 3.

전병목·류덕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조세
특례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012~2018 각 연도.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14433#AJAX>, 검색
일자: 2020. 6. 11.

_____,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검색일
자: 2020. 2.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관리사업자업체현황분기」, [http://stat.
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437&hFormId=4392&
hSelectId=4392&sStyleNum=855&sStart=201903&sEnd=201903&hP
oint=00&hAppr=1](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437&hFormId=4392&hSelectId=4392&sStyleNum=855&sStart=201903&sEnd=201903&hPoint=00&hAppr=1), 검색일자: 2020. 2. 10.

_____,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황보고」, [http://stat.molit.go.kr/
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
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
pr=1](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58&hFormId=1244&hSelectId=1244&sStyleNum=562&sStart=2020&sEnd=2020&hPoint=00&hAppr=1), 최종 검색일자: 2020. 5. 26.



2021년 예산안 편성

■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박창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김우현 ·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원

*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2021년 예산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박창환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처해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염병과 수개월째 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도 크게 위축됐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올 한 해 우리나라 재정은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장기화를 방지하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전략으로 대처했다.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최초 사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경제·방역 상황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OECD는 「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 성과에 대해 “한국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였다”라며 긍정적으로 평

가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와 홍콩 DKG(Deep Knowledge Group)는 총 25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코로나19 100대 안전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최상위권인 3위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좋은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는 해외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비유럽 국가 중 최초로 유로화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내년은 확고한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의 기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이러한 경제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I. 2021년 예산안의 모습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512.3조원에서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투자 소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편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 국가채무는 GDP 대비 46.7%로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위축으로부터 조기 회복하고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함으로써, 세입여건이 정상화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과거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IMF에서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일반정부부채는 2019년에 대비하여 7.6%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 세계 18.7%p, 선진국 평균 26.0%p의 증가수준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치이다.

다만, 증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지출구조조정 및 협업예산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또한 내년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총 9조원 수준의 협업 예산을 편성했다. 부처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부의 핵심 사업군을 12대

<표 1> 2021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C)	증감	
	본예산(A)	4차 추경(B)		(C-A)	(C-B)
총수입	481.8	470.7	483.0	1.2	12.3
(증가율)				(0.3)	(2.6)
총지출	512.3	554.7	555.8	43.5	1.1
(증가율)				(8.5)	(0.2)
재정수지	△71.5	△118.6	△109.7	△38.2	8.9
(GDP 대비, %)	(△3.5)	(△6.1)	(△5.4)	(△1.9%p)	(0.7%p)
국가채무	805.2	846.9	945.0	147.3	98.1
(GDP 대비, %)	(39.8)	(43.9)	(46.7)	(7.3%p)	(2.8%p)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간 T/F 구성을 통해 공동기획, 투자계획 사전조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협업예산을 통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지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재정성과를 높일 수 있다. 내년에는, 전문성·비교우위에 바탕하여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는 ‘전문적 분업형 협업예산’, 부처 간 전 주기 협업체계를 마련한 ‘사업주기별 협력형 협업예산’, 전체적인 사업의 틀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협력형 협업예산’, 수요자 선호를 바탕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맞춤형 협업

예산’ 등 12대 중점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분야인 산업·환경·R&D 분야 증가율이 대폭 확대되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된 것은 산업 분야로,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2020년 대비 22.9% 증가하였다. 이어서 환경 분야는, 그린뉴딜 투자, 생활환경 개선 투자 등을 중심으로 16.7%의 높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R&D 분야 투자는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BIG3,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첨단혁신기술을 중심으로 12.3% 확대 편성되었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

<표 2> 분야별 재원 배분 모습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A)	2021년 정부안(B)	증감(B-A)	
				%
◆ 총지출	512.3	555.8	43.5	8.5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4	10.7
※ 일자리	25.5	30.6	5.1	20.0
2. 교육	72.6	71.0	△1.6	△2.2
(교부금 제외)	(17.2)	(17.7)	(0.5)	(2.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4	53.3	△2.1	△3.7
3. 문화·체육·관광	8.0	8.4	0.4	5.1
4. 환경	9.0	10.5	1.5	16.7
5. R&D	24.2	27.2	3.0	12.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5.4	22.9
7. SOC	23.2	26.0	2.8	11.9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0.9	4.0
9. 국방	50.2	52.9	2.7	5.5
10. 외교·통일	5.5	5.7	0.2	4.3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1.0	4.4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7.5	9.5
(교부세 제외)	(26.8)	(34.8)	(8.0)	(29.7)
※ 지방교부세	52.2	51.8	△0.4	△0.8

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관련 소요 등에 투자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7%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SOC 분야는 디지털화·그린리모델링 등 뉴딜 투자 소요, 노후 SOC 안전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로 편성되었다.

II. 투자의 중점

내년 예산안의 최종 목표는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회복 견인 및 미래 준비라는 과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전략 과제로 삼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미래 성장동력 확보·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대 투자 중점을 설정했다.

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하여 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안전망 강화’의 뒷받침하에 추진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추진하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이다.

내년은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하여,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예산안에는 국비 기준으로 한국판 뉴딜 관련 소요를 21.3조원 반영하였으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집행여건이 확보된 디지털·그린 뉴딜 10대 대표과제 및 안전망 강화에 한국판 뉴딜 투자예산의 80% 수준을 집중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전 산업 데이터·5G·AI 활용 및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국비 7.9조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댐 구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강화한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경제 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스마트물 관리체계 구축 등 녹색 인프라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실업 불안 등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는 5.4조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며,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및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 등 사람투자 예산도 반영했다.

2. 4대 중점 투자 분야

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우선, 국민생계의 터전인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5.8조원에서 8.6조원 규모로 확대한

다.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2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실시하여, 민간 차원의 일자리가 57만개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년 고용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을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소비 창출을 위한 예산도 2.1조원 반영했다. 내수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문화·관광 분야에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 지원에 0.5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상권 회복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5조원에서 18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19 안정 이후 국내 관광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관광객에게 공항·숙소·관광지 등 동선에 따라 교통·숙박·볼거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를 2개 권역에서 시범 실시한다.

미래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 양측에 65.9조원 규모의 투자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을 33.9조원 투입하여, 기업설비 구축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금년보다 18조원 이상 늘어난 72.9조원을 공급한다. 공공부문 또한,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에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예산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수출여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2조원 반영했다.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해 재정을 0.6조원 투입하여 무역정책자금 5.8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확충한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하여 K-푸드·의료·뷰티 등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지방경제회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예산에도 16.6조원을 투자한다.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SOC에도 당초계획보다 확대한 11조원 수준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농어촌 등에 젊은 계층이 유입, 정착할 수 있도록 2.3조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 미래 성장동력 회복

우리나라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R&D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1년 예산안은 소재·부품·장비, BIG3,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R&D 투자를 24.2조원에서 27.2조원으로 12% 이상 확대하였다. AI·SW 등 디지털 분야 고등인재와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신산업과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혁신모험자금 7조원을 공급한다. 그리고 혁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시범구매 지원 규모도 5배 이상 늘렸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에는

7.1조원 투자한다.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 5G 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 AI기술 도입·융합 지원 등 D.N.A. 생태계 조성에 3.1조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산업(BIG3)에 4조원을 투자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1조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 지원 0.7조원 등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 및 풍력발전 초기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한다. 또한, 수소생산기지 확충, 수소자동차 구매보조 등 수소경제 조기 도래를 위한 투자도 0.4조원에서 0.6조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5.5조원을 투입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 품목을 대(對)일본 100개에서 대(對)세계 338개로 다변화한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위하여, 스마트산단에 물류·통합관제·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후 산단을 재정비한다.

다.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46.9조원을 투입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단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요양보험 국고지원 규모도 10.2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

가 공급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한다. 아울러,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확대 실시한다.

또한,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앞장서기 위한 소요예산 20조원을 반영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소요 예산 0.8조원을 반영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내년 신규 가입이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6.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80% 지원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장애인, 농어민, 유공자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올해 기초생보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단가를 인상하였으나, 내년 부터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농·어가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령농 연금지급을 확대하고 수산 공익 직불제를 도입한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훈보상금을 3% 인상하는 동시에,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도 월 2.3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라.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우선,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금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19 장기화 위기에 대비하여 ‘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3개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소를 확충한다. 신속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다부처 협력 신약개발을 신규 추진하고, 국내 유망 기업에 대한 임상단계별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수해예방 예산도 금년 2.1조원에서 2.6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170개소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도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확대한다. 전국 73개 국가 하천에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3년까지 국가댐 37개소에 디지털 트윈·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댐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3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27조원 규모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지속 투자하는 동시에,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공간 등 3조원 규모의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도 새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강군 육성을 통해 국가안보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예산 52.9조원을 투입한다.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 국방전력 고도화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병인건비·급식비·피복비 단가 인상, 병사 군 단체보험 신규지원 등 3.8조원 규모의 「장병사기진작 7종 패키지 예산」도 함께 마련했다.

Ⅲ. 맺음말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위협요인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버텨 왔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방역과 경제 모두를 지켜내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의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되며,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다시금 가중되었다.

따라서 2021년은 앞으로의 우리 경제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어떻게 복귀하게 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2021년 예산안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안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그간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내년 예산안 역시,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¹⁾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COVID-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의 혼란 중에 정부는 9월 3일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강한 버팀목’ 역할이 강조되며, 현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확장적 재정기조가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국민 안

전과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코로나19 및 다양한 재난 상황에 노출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정책 패키지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큰 특징이다. 한편, 전환기의 성장을 위해 과감한 인적 투자를 계획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이질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을 위한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동일한 재정운용 기조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강조되었던 기본방향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이 부각되었으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과감한

1) 연구원 내 토론을 통해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에 많은 의견을 주신 동료 연구위원들과 익명의 심사자, 자료 및 소중한 의견을 전해주시신 김현아 선임연구위원, 윤성주·오종현 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재정혁신의 필요성 또한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는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 및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우리 사회가 경제·사회구조 전반에서 대대적인 전

환기에 접어들 것을 예상하고, 재정을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 1] 2021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고용 유지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4대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소비활력 제고	미래산업 육성(DNA, BIG3)	취약계층 보호 강화	재해예방 및 국민생명·인권 보호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 확충	그린산업 육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수출활력 제고	주력 산업 역동성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군사기진작 지원
국가균형발전 본격 투자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0, p. 9

[그림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방향

2017~2021년	2018~2022년	2019~2023년	2020~2024년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 역할 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재정이 적극 뒷받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 (한국형 뉴딜, 포용기반 확충, 전 국민 안심사회 실현)
zero-base에서 강력한 양적·질적 구조조정 추진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건전성 강화 노력 병행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과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재정운용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 혁신성·포용성 제고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II.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1. 재정 총량

2020년 예산은 3.8%의 경상GDP 성장률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의 효과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며 약 12.2조원 규모의 세입경정(2020년 1차 추경: 0.8조원, 2020년 3차 추경: 11.4조원)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국세 수입은 292.0조원에서 279.7조원으로 낮아졌다. 2021년 국세수입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며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경상GDP 성장률 4.8%), 법

〈표 1〉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2021년 예산안	2020년 대비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예산	추경	예산	예산	추경	2022년	2023년	2024년	
총수입	481.8	470.7	483.0	0.2	2.6	505.4	527.8	552.2	3.5
국세	292.0	279.7	282.8	△3.1	1.1	296.5	310.1	325.5	2.8
세외	27.9	29.1	28.6	2.5	△1.7	28.9	29.9	30.2	2.0
기금	161.9	161.9	171.6	6.0	6.0	180.0	187.8	196.6	5.0
총지출	512.3	546.9	555.8	8.5	1.6	589.1	615.7	640.3	5.7
예산	351.1	374.1	370.9	5.6	△0.9	394.8	411.3	423.8	4.8
기금	161.1	172.8	184.9	14.8	7.0	194.3	204.4	216.5	7.7
의무	255.6	255.1	267.3	4.6	4.8	282.5	295.7	314.2	5.3
복지 분야 법정지출	119.7	123.2	131.5	9.9	6.7	139.9	148.8	160.6	7.6
지방 이전재원	111.6	107.8	108.7	△2.6	0.8	113.9	117.2	122.9	2.4
이자지출	17.0	16.9	19.3	13.5	14.2	21.1	22.4	23.3	8.2
기타 의무지출	7.4	7.2	7.7	4.1	6.9	7.7	7.4	7.4	0.0
재량	256.6	291.8	288.5	12.4	△1.1	306.6	320.0	326.1	6.2
조세부담률	-	19.3	18.7	-	-	18.8	18.9	19.0	-
국민부담률	-	27.2	26.6	-	-	26.7	27.0	27.3	-
관리재정 수지	△71.5	△111.5	△109.7	-	-	△123.2	△128.2	△127.5	-
(GDP 대비)	(△3.5)	(△5.8)	(△5.4)	-	-	(△5.9)	(△5.9)	(△5.6)	-
통합재정 수지	△30.5	△76.2	△72.8	-	-	△83.7	△87.9	△88.1	-
(GDP 대비)	(△1.5)	(△3.9)	(△3.6)	-	-	(△4.0)	(△4.0)	(△3.9)	-
국가채무	805.2	839.4	945.0	-	-	1,070.3	1,196.3	1,327.0	-
(GDP 대비)	(39.8)	(43.5)	(46.7)	-	-	(50.9)	(54.6)	(58.3)	-
경상 GDP 성장률	0.6(2020. 6. 1.)		4.8	-	-	4.0	4.0	4.0	-

주: 1. 2020년 예산은 국회확정예산 기준

2. 추경은 예산안 발표 기준인 3차 추경 기준²⁾

출처: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0.

2) 2020. 9. 22. 기준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확정으로 총지출은 554.7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18.6조원(GDP 대비 △6.1%), 통합재정수지는 △84.0조원(GDP 대비 △4.4%), 국가채무는 846.9조원(GDP 대비 43.9%)으로 변화하였다.

인세 세수 부진 등을 예상하며 282.8조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수입은 483조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책정되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하에서도 2021년 이후 경제성장세 회복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지만,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을 3.5%로 하향 조정하며(2019~2023년: 3.9%)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부진이 중기 세입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했다.

2021년 예산안 수입은 2020년 0.6%, 2021년 4.8%의 경상GDP 성장률(명목 성장률)을 기반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국내외 기관들은 실질 GDP 기준, 2020년 -2.1~-1.1%, 2021년 2.8~3.5%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어³⁾ 정부의 전망치와 차이가 존재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정확한 경제전망치의 추정이 어렵지만,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 등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정부의 경우에도 다소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세수 부족을 경험했던 사례가 존재한다. 경제 회복의 정책 의지가 담긴 경제전망치가 아닌 근거 기반의 객관적 전망치의 제시, 검증 및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회복, 국정과제 이행의 가속화와 더불어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 과제의 반영으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총지출은 555.8조원으로 2020년 예산 대비 5.6% 증가했다. 중기계획에도 연평균 5.7%의 지출 증가율이 반영되어 있으나, 2019~2023년 중기계획의 지출 연평균 증가율 6.5%에서 0.8%p 하향 조정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강조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GDP 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지출 증가세는 경제 회복의 추이를 보아 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했다.

포용적 고용 및 사회안전망 공고화를 중점 투자 방향으로 한 2021년 예산안은 복지분야의 법정 의무 지출을 9.9% 증가시켰다. 2020~2024년 중기계획

<표 2> 2020~2021년 한국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		
	실질GDP 증가율	GDP 디플레이터	실질GDP 증가율	GDP 디플레이터	
OECD	single-hit	-1.2	-0.6	3.1	0.3
	double-hit	-2.5	-0.6	1.4	0.2
IMF		-2.1		3.0	
KDI		-1.1		3.5	
한국은행		-1.3		2.8	

주: OECD는 코로나19의 단일 충격(single-hit)과 이중 충격(double-hit)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추정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2020;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 2020; 한국경제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20. 9.;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

3) OECD의 이중 충격(double-hit) 시나리오를 제외한 전망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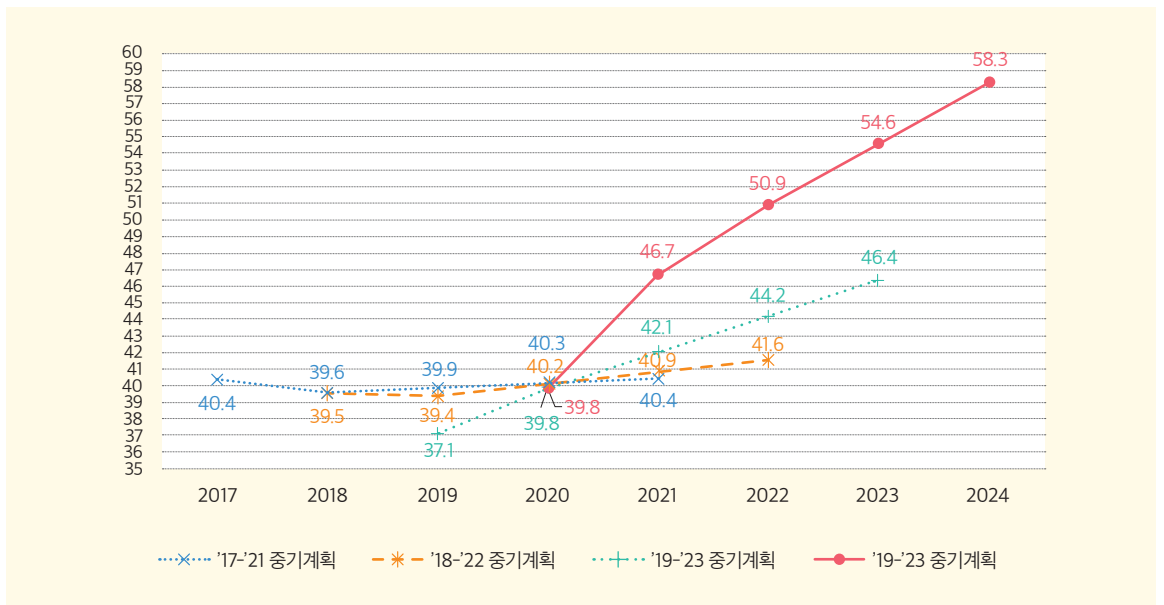
또한 연평균 7.6%의 높은 법정외무지출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는데,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아동·보육 부문의 지출 감소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지원, 4대 공적연금 지원, 기초연금, 구직급여·산재보험급여 등 고용·노동지원, 보훈 등에서 모두 꾸준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재량지출은 경제 회복 및 한국판 뉴딜의 적극적 재정운용의 의지가 반영되어 2021년 예산에 12.4%, 2020~2024년 중기계획 기준으로 연평균 6.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측면에서 「2021년 예산안」

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를 명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세간에 통용되고 있던 관리재정수지 3% 적자, 국가채무 40% 수준⁴⁾의 본격적인 경로 이탈이 예산안 및 중기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는 5.4% 적자,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46.7%로 계획되었으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관리재정수지는 향후 5% 중후반 대의 적자, 국가채무 수준은 50%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2019~2023 중기계획과 2020~2024 중기계획은 신계열 기준 GDP가 반영된 비율이며, 2017~2021 중기계획과 2018~2022 중기계획은 발표 당시 기준 수치임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기준으로 저자 작성

4) 기준의 근거로는 EMU(유럽 경제 통화 연합,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SGP(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제시된 재정적자 한도 3%가 거론된다(박형수 류덕현, 2006). 국가채무 40%의 기준은 근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1998년 영국의 재정법 제155조에 재정안정규약을 두며, 영국 재무성(HM Treasury)이 안정적인 채무비율로 GDP 대비 공공부문 순 부채비율의 상한을 40%로 설정했다는 기록이 있다(최승필, 2013).

2. 분야별 자원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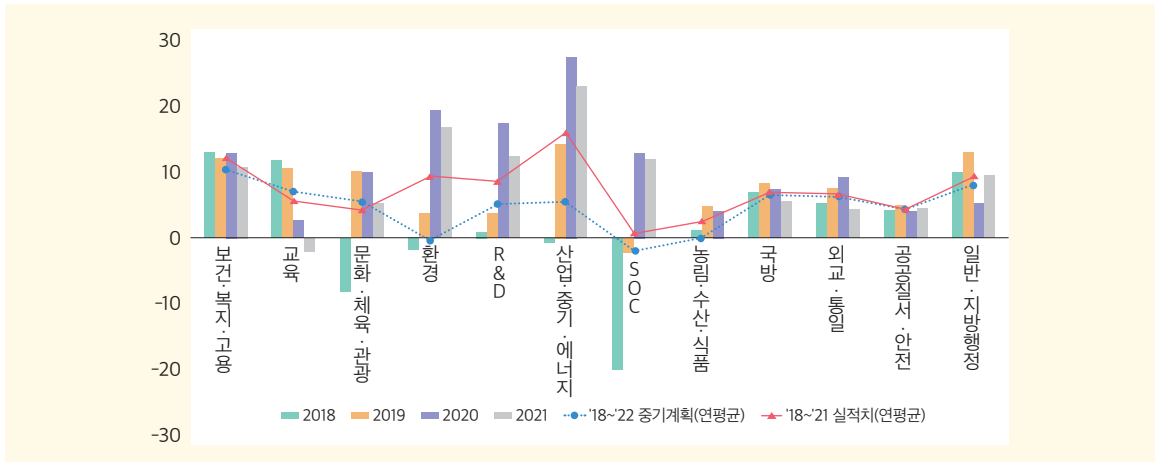
분야별 자원 배분 현황에서는 「2021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여겨지는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는 산업·중기·에너지, 환경, R&D, SOC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반면, 현 정부의 첫 해 예산안인 2018년 예산에 11.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던 교육 분야는 「2021년 예산안」에서 유일하게 전년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⁵⁾

2018년 예산안에 증가율이 저조하거나 감소세였던 산업·중기·에너지, 환경, R&D, SOC 분야는 2020~2021년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정부의 분야별 자원 배분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와 같은 정부의 후반기 투자 방향의 변화 양상을 정부 첫 해의 중기계획(「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변화의 강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8~2022년 중기계획에 각각 5.5%(산업·중기·에너지), 5.2%(R&D), -0.5%(환경)로 연평균 증감률이 반영되어 있던 해당 분야는 2018년부터 2021년 예산안까지의 실적치 기준 각각 16.0%(산업·중기·에너지), 8.6%(R&D), 9.4%(환경)의 실제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2018~2022년 중기계획과의 격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원 배분의 변화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산업·중기·에너지는 10.7%, 환경은 8.7%, R&D는 7.2%, SOC는 6.0%의 연평균 증가율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안전망 공고화 및 포용 사

[그림 4] 예산안 각 연도 분야별 지출 증감률(2018~2021년)

(단위: %)



주: 점선은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반영된 분야별 연평균 증감률이며, 실선은 2018~2021 각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실제 자원 증감률을 연평균한 수치임

출처: 기획재정부, 각 연도 예산안 기준

5) 단, 교육 분야 예산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성장률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내국세 수입규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표 3>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512.3	555.8	589.1	615.7	640.3	5.7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217.4	230.2	242.7	7.7
2. 교육	72.6	71.0	74.2	75.4	77.9	1.8
3. 문화·체육·관광	8.0	8.4	8.8	9.2	9.4	4.2
4. 환경	9.0	10.5	11.4	12.1	12.6	8.7
5. R&D	24.2	27.2	29.1	30.7	32.0	7.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32.3	34.2	35.6	10.7
7. SOC	23.2	26.0	27.8	28.7	29.3	6.0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23.0	23.3	23.5	2.3
9. 국방	50.2	52.9	56.1	58.6	60.9	5.0
10. 외교·통일	5.5	5.7	6.0	6.2	6.5	4.1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22.8	23.7	24.6	4.2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87.6	92.0	94.9	4.7

주: 2020년 국회 확정예산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0, p.12

회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향후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할 계획이다.

Ⅲ. 국가채무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빠른 증가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가채무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 자료

에 따르면, 2020년 급속한 경제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수정 및 세입경정으로 1.9%p의 채무비율이 증가했고,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며 각종 세금의 감면과 지출의 증가로 1.7%p의 채무비율이 추가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대응하는 단기적인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할 특수한 재정운용 환경에서 발생한 지출 및 채무 증가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운용 측면에서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비정상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림 5]와

같이 중기 계획 시점인 2024년까지도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는 유지된다. 즉,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 시점에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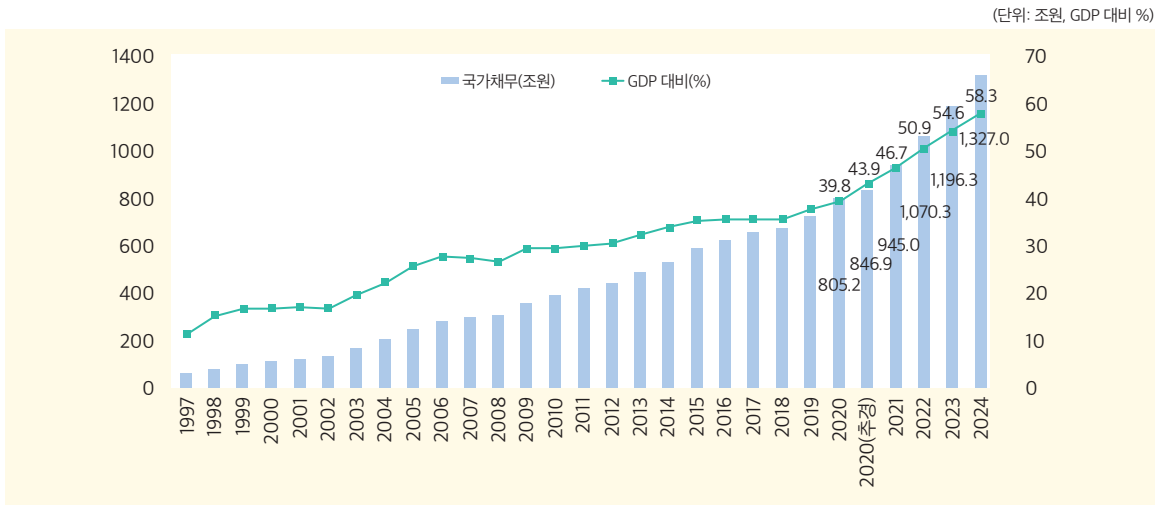
<표 4>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변화 분해

		(단위: 조원, %, %p)			
구분		명목 GDP	국가채무	국가채무 비율	
수준	2019년	① 결산	1,919.0	728.8	38.0
	2020년	② 본예산	1,992.0	802.5	40.3
		③ ②+경제성장률 수정 (3.8%→0.6%)	1,930.5	802.5	41.6
		④ ③+성장을 전망 변화에 따른 세입경정		813.8	42.2
		⑤ ④+세금 감면 및 지출 확대		846.9	43.9
효과 분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변화 (⑤-① = ①+②+③)		-	118.1	5.9
	① 본예산 편성 (②-①)		-	73.7	2.3
	② 경제여건 악화 (④-③ = ②-③+②-④)		-	11.3	1.9
	②-③ 명목 GDP 감소 (③-②)		-	0.0	1.3
	②-④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경정 (④-③)		-	11.3	0.6
	③ 세금 감면 및 지출 증가 (⑤-④)		-	33.1	1.7

주: 1. 명목 GDP의 경우 2019년 확정치(2020년 6월 2일 발표)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였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발표치와 다를 수 있음
 2. 2020년 본예산의 국가채무는 805.2조원에서 2019년 추경예산과 결산의 차이인 2.7조원을 차감한 수치임. 이는 2020년 본예산 수립 당시 2019년 결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하기 위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 자료

[그림 5] 국가채무 추이



주: 2020(추경)은 4차 추경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통계-주제별 통계-정부 재정-국가채무현황(1997~2019),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검색일자: 2020. 9. 1.;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

<표 5>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경	전망				
국가채무	839.4	835.6	945.0	1,070.3	1,196.3	1,327.0
적자성 채무	511.2 (60.9)	506.9 (60.7)	593.1 (62.8)	691.6 (64.6)	795.7 (66.5)	899.5 (67.8)
금융성 채무	328.3 (39.1)	328.8 (39.3)	351.9 (37.2)	378.8 (35.4)	400.5 (33.5)	427.4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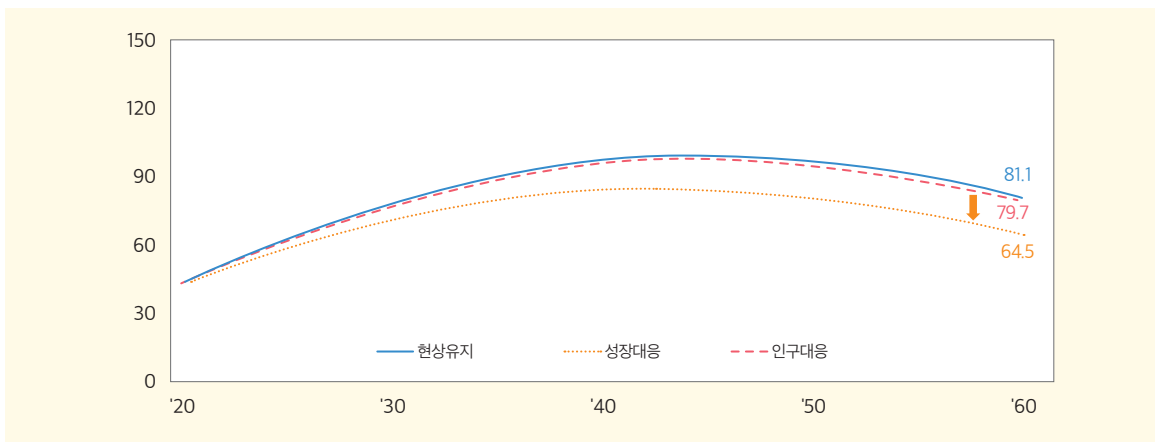
주: 1.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2. () 안은 비중

출처: 대한민국 정부,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0.

[그림 6]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장기 전망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 2020.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024년 기준 899.5조원으로 2020년 대비 392.6조원, 약 77.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소득분배 개선 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성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일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0~2060 장기재정전망」은

인구 및 성장률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60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을 64~81% 수준으로 제시했다. 전망치는 총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가정을 기반으로 추정된 것이다.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와 같은 채무비율 수치의 달성은 강한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국가채무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신용등급은 한 국가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채무 수준 또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 요인이 될 수 있다. 허인 외(2012)는 약 30%의 국가채무 상승이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는 실증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으로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용평가등급사인 피치(Fitch)는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의 장기외환발행 디폴트레이팅(Long-Term Foreign-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 IDR)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낮추면서 해당 국가의 높은 국가채무 비중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⁶⁾ 피치는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 수준⁷⁾이 중기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으며(meaningful pressure on the rating over the medium-term), 재정지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⁸⁾

국가채무의 상방 압력은 중앙 재정 외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2020~2024

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중앙 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포함하고 있다. 윤성주 외(2019)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한국의 가계부채(2019년 1분기 기준 1,540.0조원), 기업부채(2018. 12. 기준 GDP 대비 101.7%, OECD 회원국 평균 94.0%),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보증(2016년 기준 GDP 대비 3.8%)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생적 경제 충격이 지속될 경우 민간부채가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제시한 4대 공적연금의 추계결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담 요인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재정여력(fiscal space)은 현시점에서 국가가 감당 가능한 최대한의 국가채무 규모를 의미한다(이태석 외, 2018). 그러나 ‘국가가 감당 가능’하다는 의미는 최대한의 세수를 확보하는 래퍼곡선(Laffer curve)상의 이론적인 세율 인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세율 인상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비용을 수반한다. 일례로 전영준·송지은(2017)은 세대 간 회계(generation accounting)법을 활용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이 큰 점을 밝혔다. 따라서 세율 인상은 한국의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태석 외(2018)는

6) Fitch, Rating Action Commentary, “Fitch Revises United States20 Outlook to Negative; Affirms at ‘AAA’”,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revises-united-states-outlook-to-negative-affirms-at-aaa-31-07-2020>, 검색일자: 2020. 9. 18.
 Fitch, Rating Action Commentary, “Fitch Revises Outlook on Japan to Negative; Affirms at ‘A’”,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revises-outlook-on-japan-to-negative-affirms-at-a-28-07-2020>, 검색일자: 2020. 9. 18.
 7) 경상 GDP 대비 46.0% (2023년 기준)
 8) Fitch, Rating Action Commentary, “Fitch Affirms Korea at ‘AA-’; Outlook Stable”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11-02-2020>
 검색일자: 2020. 9. 18.

GDP 대비 정부의 이천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재정여력의 추산치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의 변화보다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 이천지출의 변화에 따라 재정여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국가채무를 둘러싼 다양한 연구결과와 전문가의 의견들은 결국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운용 계획에도 이러한 필요가 반영되어 있다. 2021년 예산안에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 및 협업예산 편성 등의 노력과 더불어 재량지출의 10%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및 공공부문의 경비절감을 시행하고 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한 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② 수입 기반 확충 ③ 투자재원 다변화 ④ 재정위험 관리 체계화 ⑤ 재정관리체계 혁신 ⑥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증가하는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한국판 뉴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정책을 통한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각종 지출 관리,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대된 복지수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재정준칙 도입에 관해 제21대 국회는 재정건전화에 위한 다양한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정건전화법안이 관리재정

<표 6> 제20~21대 국회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현황

제안자	제출일자	의결결과	주요 내용
정부	2016. 10. 27.	임기만료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
송영길 의원 등 39인	2016. 12. 24.	임기만료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가채무를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의 1만분의 35 이하로 유지
송언석 의원 등 13인	2019. 5. 23.	임기만료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0 이하로 유지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
류성걸 의원 등 11인	2020. 6. 3.	소관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
추경호 의원 등 15인	2020. 6. 5.	소관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
송언석 의원 등 10인	2020. 7. 1.	소관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 •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
윤희숙 의원 등 11인	2020. 7. 15.	소관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수지통제계정 신설 • 재정수지통제계정상 국가채무 비율 3% 초과하는 경우, 채무상환 의무 발생

주: 모든 법안에서 전쟁, 대규모 재난, 대내외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 혹은 발생 우려 시 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일자: 2020. 9. 5.

수지 적자 폭 2~3%, 국가채무 비율 45%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황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5% 중반, 국가채무 비율 50% 후반을 새로운 중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정부는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라 9월 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을 발표할 계획을 밝혀 어떠한 형태의 재정준칙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추고 제안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고려는 ‘재정은 무조건 건전해야 한다’는 단순한 도그마의 산물이 아닐 수 있다. 건전 재정은 서구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체계가 뒤늦게 마

련되기 시작되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정지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입과 동시에,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맞닥뜨릴 다음 세대가 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망치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단기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표 7> 한국판 뉴딜 투자규모

(단위: 조원)

구분(국비기준)		투자계획		
		2020추~2025년	2020추~2022년	2021년 예산안
총계		114.1	49.0	21.3
디지털 뉴딜	합계	44.8	18.6	7.9
	1. D.N.A. 생태계 강화	31.9	12.5	5.4
	2.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0.8	0.6	0.4
	3. 비대면 산업 육성	2.1	1.1	0.5
	4. SOC 디지털화	10.0	4.4	1.9
그린 뉴딜	합계	42.7	19.6	8.0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2.1	6.1	2.4
	6.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4.3	10.3	4.3
	7.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구축	6.3	3.2	1.3
↑				
안전망 강화				
합계		26.6	10.8	5.4
1. 고용사회 안전망		22.6	9.3	4.7
2. 사람투자		4.0	1.5	0.7

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0, p. 12

IV. 한국판 뉴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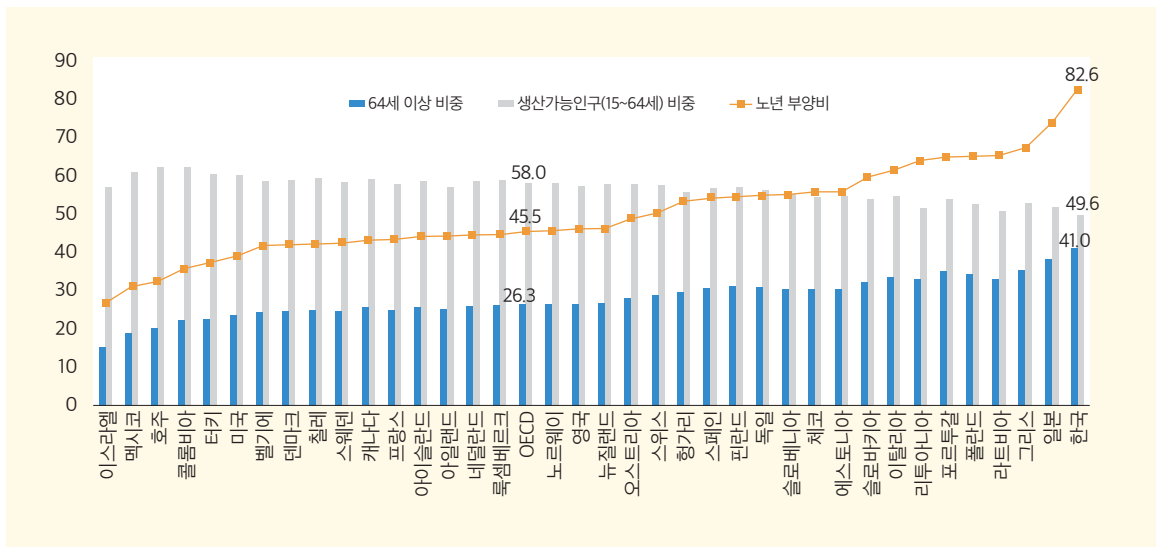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혁신의 노력들은 지속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함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2020년 3차 추경의 4.8조원 투자를 시작으로 추진되었다. 2025년까지 국비 기준 총 114.1조원, 국비 매칭 지방비 및 민간 투자까지 합쳐 160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2021년 예산안에는 21.3조원이 배정되었으며, 지방비 및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32.5조원의 투자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부양 목적이 아니라 잠재성장

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 전환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⁹⁾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고착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며, 사회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OECD 추정 2060년 기준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82.6으로 OECD 회원국 평균 45.5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기준 실질GDP 성장률은 2019년 기준 2.0% 성장에 그쳤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저성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디지털·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 인적자본 투자와 생산성 향상,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한국판 뉴

[그림 7] 2060년 기준 인구구조 추정(OECD)

(단위: %)



딜의 기본 틀이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의 12개 과제 중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산업 육성 관련 과제들은 대부분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며 자연스럽게 정책 수요가 높아진 영역들로 판단된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에 해당되겠지만, D.N.A. 생태계 강화에 포함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의 경우 재정투입뿐 아니라 각종 정보가 효율적으로 집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법 제도의 정비가 수반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린 뉴딜의 8개 과제는 2009년 추진된 녹색성장에 대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의 녹색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원자력 대신 풍력·태양력·수소의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재정건전성 우려를 잠재울 만큼 정책 패키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28개(디지털 뉴딜 12개 과제, 그린 뉴딜 8개 과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8개 과제)에 달하는 정책과제의 구체성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은 2019년 미국에서 관심을 받았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논의하며, 중요하고 좋은 정책이지만 단순한 정책 구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사안들에 대한 깊은 논의를 거친 구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¹⁰⁾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학습은 기존 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능가하는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존재하는가, 다양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탄소배출 감소, 미세먼지 감소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은 기존 화력발전 산업을 어떤 형태로 대체하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등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해

<표 8>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과제

디지털 뉴딜(2020~2025년): 44.8조원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1.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5.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7.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10.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2.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6.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8.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11. 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3. 5G·AI 기반 지능형(AI) 정부		9.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12.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4. K-사이버 방역 체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보도자료, 2020. 7. 15.

10) Paul Krugman, 「Hope for a Green New Year」,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12/31/opinion/green-new-deal-democrats.html>
접속일자: 2020. 9. 7.

직접 인용 "Green New Deal. Is this actually a good idea? Yes, it is. But it's important to go beyond the appealing slogan, and hash out many of the details. (중략) So what does the Green New Deal mean? It's not entirely clear, which is what makes it a good slogan."

<표 9> 녹색성장과 그린 뉴딜의 추진 과제 비교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 107.4조원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및 국가 위상 강화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8. 녹색 국토·교통의 조성
2.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9. 생활의 녹색 혁명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6. 산업구조의 고도화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그린 뉴딜(2020~2025년): 42.7조원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4.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7.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	5.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8.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6.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보도자료, 2020. 7. 16.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2009. 7.


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산적해 있다. 한국 판 뉴딜에 담긴 모든 정책들의 구호는 구체적인 그림과 목표가 설계되고, 최대한의 과학적 근거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형태로 치환되어야 정책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련된 재원이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필요한 기업 및 인적 자본 투자에 동원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정책 전달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Howell(2017)은 R&D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이 벤처회사의 기술혁신에 의한 특허 및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정책효과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 더욱 크게 나타나며, 기업업력이 낮고 소규모의 벤처회사 대상으로 1회성으로 지원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Bronzini and Iachini(2014)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R&D 보조금 정책에 따른 기업의 투자 결정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처럼 정책의 성패는 정책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선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미시적인 전달체계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재정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책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측면뿐 아니라 법·제도의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 비재정적 측면의 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미시적인 세부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V. 맺음말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등 거센 재정적 도전이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계획이 마련되었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의 추진에 의한 중기 재정지출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통해 재정지출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최선의 정책효과를 위한 예산 사업의 신중한 정책 설계 및 효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존 시범 사업의 결과 및 선행연구들의 효과분석 근거를 최대한 확충하여 국회에 제공하고, 국회는 이에 근거하여 최적의 재정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KDI School, 「전환적 뉴딜 세미나」, 2019. 7.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보도자료, 2020. 7. 15.
-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2020.
- _____,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
- _____,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 _____,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
- _____,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0.
- _____, 「2020~2060 장기재정전망」, 2020.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2009. 7.
- 대한민국 정부,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0.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보도자료, 2020. 7. 16.
- 박형수·류덕현,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윤성주·정도진·장석진·이용석, 『국가부채 현황 및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이태석·허진욱·이지현·전혜지·김우철·이동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8.
- 전영준·송지은,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한 재정의 지속가능한 분석』, 정책분석 17-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최승필, 「총량적 채무규율의 독입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국가부채와 재정준칙」, 『한국재정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자료집』, 2013.
-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37(1), 2020. 9.,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 8.,
- 허인·안지연·양다영, 『국가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Bronzini, R., and Iachini, E., “Are incentives for R&D effective? Evidence from a regression discontinuity approach,”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6(4), 2014, pp. 100~134.

Howell, S. T., “Financing innovation: Evidence from R&D grants,” *American Economic Review*, 107(4), 2017, pp. 1136~1164.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2020.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 2020.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통계-주제별 통계-정부·재정-국가채무현황(1997~2019),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검색일자: 2020. 9.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일자: 2020. 9. 5.

Fitch, Rating Action Commentary, “Fitch Affirms Korea at ‘AA-’; Outlook Stable”,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11-02-2020>, 검색일자: 2020. 9. 18.

_____, Rating Action Commentary, “Fitch Revises Outlook on Japan to Negative; Affirms at

‘A’”,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revises-outlook-on-japan-to-negative-affirms-at-a-28-07-2020>, 검색일자: 2020. 9. 18.

_____, Rating Action Commentary, “Fitch Revises United States20 Outlook to Negative; Affirms at ‘AAA’”,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revises-united-states-outlook-to-negative-affirms-at-aaa-31-07-2020>, 검색일자: 2020. 9. 18.

OECD.Stat, Population projection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OP PROJ>, 인출일자: 2020. 9. 2.

Paul Krugman, “Hope for a Green New Year,”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12/31/opinion/green-new-deal-democrats.html>, 검색일자: 2020. 9. 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사업 이자비용 공제 제한 최종 규정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0년 7월 28일 CARES법에 의해 신규 도입된 사업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내국세법 Section 163(j)의 변경사항에 관한 최종 규정 패키지를 발표함¹⁾

- 본 조항은 2017년 12월 22일 Tax Cuts and Jobs Act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2020년 3월 27일 개정됨

■ 본 최종 규정을 통해 이자 한도 구성 요소, 공제 한도 계산방법, 납세 대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사업 이자비용 공제는 일반적으로 ① 납세자의 사업이자 소득, ② 납세자의 조정 과세 소득(ATI)의 30%(일부의 경우 50%), ③ 납세자의 물품구매 담보대출(floor plan finance) 이자비용의 합계로 제한됨
- 2020년 과세연도 기준 총수익이 2,600만달러²⁾

이하인 특정 소규모 사업체,³⁾ 부동산 거래 또는 사업체, 농업 사업체 및 특정 규제를 적용받는 공익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패키지는 최종 규정 외에도 추가적인 제안 규정, 세수관리 절차 고시와 같은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최종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 사업 이자비용 공제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 규정 REG-107911-18에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함
 - 특정 제약에 대한 최종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 본 제안 규정의 규칙을 따를 수 있음
 - 고시 Notice 2020-59에서는 내국세법 Section 163(j)(7)(B)에 따라 적격 주거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거래 또는 사업에 대해 세이프하버 조항을 제공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영국 - 2020 Finance Act 제정]

■ 영국 의회는 2020년 7월 22일 2020년도 재정법(Finance Act)을 제정함^{4), 5)}

- 법인세율은 인하 없이 기존 19%의 세율을 유지함⁶⁾
 - 영국은 2015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0년 4월

1) IRS News Release, "IRS issues final regulations and other guidance on business interest expense deduction limitation", <https://www.irs.gov/newsroom/irs-issues-final-regulations-and-other-guidance-on-business-interest-expense-deduction-limitation>

2)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07억 7100만원임

3) 수익액 기준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됨

4) News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Enacts Finance Act 2020", Aug 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06_uk_1 (accessed Sep 1, 2020)

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0/14/contents/enacted>, 검색일자: 2020. 9. 1.

6) News IBFD, "United Kingdom - Finance Act 2020: United Kingdom Introduces a New Digital Services Tax and Maintains the Corporation Tax Rate at 19% for 2020-2021", Aug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1_uk_1 (accessed Sep 1, 2020)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8%로, 2016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을 17%로 인하할 것이라 발표하였음⁷⁾

- 그러나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11일 인화된 17% 세율이 아닌 기존 19%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1년 4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19%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함⁸⁾
- 본 재정법에는 위의 2020년 3월의 논의가 법률로 반영된 것임
- 다음에서는 2020년도 재정법 가운데 중요 개정 사항들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

■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파견 근로자의 세법상 지위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Loan Charge 과세방안을 개정함⁹⁾

- 파견 근로자의 세법상 지위를 변경함
 - 모든 공공부문과 대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민간부문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

용 관련 지위를 정할 의무가 있음

- 위 의무 이행의 결과로써 공공부문 또는 대규모·중간 규모 민간부문에 용역을 공급하는 파견직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용 지위를 확정하게 됨
 - 이때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결정한 고용 지위를 거부할 권리도 함께 부여됨

● Disguised remuneration Disguised remuneration¹⁰⁾ 형식의 위장 거래 관련 과세 방침(Loan Charge)¹¹⁾을 개정함

- 2010년 12월 9일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거래에는 Loan Charge를 적용하지 않음
- 2016년 4월 6일 이전에 이루어진 고액 대출거래가 HMRC에 신고되었고 HMRC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 Loan Charge를 적용하지 않음
- HMRC는 위 개정으로 인하여 Loan Charge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대출거래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납부액을 환급할 예정임

■ 디지털서비스세를 시행함^{12), 13)}

7)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to-17-in-2020>, 검색일자: 2020. 9. 4.
 8) HMRC,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nges-to-corporation-tax-rates-from-1-april-2020>, 검색일자: 2020. 9. 4.
 9) News IBFD, "United Kingdom - United Kingdom Introduces Income Tax Changes as Part of Finance Act 2020", Aug 1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14_uk_1 (accessed Sep 1, 2020)
 10) Disguised remuneration Disguised remuneration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세회피전략임. 일반적으로는 제3자(주로 신장)로부터의 대출이나 금전차입 등의 거래를 중간에 개입시키고, 채권자가 그 대출금 또는 차입금을 다시 회수하지 않는 일종의 영구 대여의 형태로 이루어짐. 주로 근로자나 개인 간 소득 지급 시 월급의 일정 부분을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됨(<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tax-avoidance-disguised-remuneration>, 검색일자: 2020. 9. 1.)
 11) Loan Charge는 위 Disguised remuneration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과세방침으로써, ①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기간 이상 위 조세회피전략으로 추정되는 대출계약이 존속하고 ② 총상환금이 잔여대출금 미만인 경우 이를 'outstanding' 거래로 분류하여, 잔여 대출금만큼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부과함(<https://www.gov.uk/guidance/report-and-account-for-your-disguised-remuneration-loan-charge#the-loan-charge>, 검색일자: 2020. 9. 4.)
 12) News IBFD, "United Kingdom - Finance Act 2020: United Kingdom Introduces a New Digital Services Tax and Maintains the Corporation Tax Rate at 19% for 2020-2021", Aug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1_uk_1 (accessed Sep 1, 2020)
 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the-digital-services-tax/digital-services-tax>, 검색일자: 2020. 9. 1.



- 2020년 4월 1일부터 영국 유저를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의 2%를 과세함
 - 디지털서비스 관련 활동으로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 플랫폼 등이 있음
 -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룹 내 총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5억파운드¹⁴⁾ 이상이고, 동시에 영국 관련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500만파운드¹⁵⁾ 이상인 다국적기업임
 - 영국 관련 디지털 서비스 매출 계산 시 최초 2,500만파운드는 계산에서 제외함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하 ‘GAAR’)의 절차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¹⁶⁾
- 본 개정은 고의로 HMRC의 GAAR 관련 정보제공 요청 또는 질의를 회피하는 일부 납세자들에 대응하기 위함임
 - HMRC가 통상적인 조사기간(12개월)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마련함
 - 납세자들은 GAAR 적용에 따른 조정 내용에 불복할 수 있고 독립된 자문위원회(advisory panel)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아일랜드 - 코로나19 극복 지원 관련 법안 초안 발표]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20년 7월 24일 개인 및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함¹⁷⁾
- 법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 이월 및 납세 이자 면제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함
 -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거래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에 대해 손실 이월을 허용함
 - 단독 또는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손실¹⁸⁾이 발생하였고, 아일랜드 조세통합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전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¹⁹⁾
 - 예상 손실의 최대 50%를 이전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규칙보다 일찍 이월하는 것을 허용하며, 나머지 50%의 손실은 정상 규칙에 따라 재처리함
 - 2019년에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역시 2019년 과세연도 수익에서 최대 2만 5천유로²⁰⁾까지 손실액을 사전 공제할 수 있음

14)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7,936억원임

15)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96억원임

16) News IBFD, "United Kingdom - Finance Act 2020: United Kingdom Introduces Changes to HMRC's Priority on Insolvency,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Directors, Taxation of Coronavirus Support Payments and GAAR". Aug 26,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6_uk_2 (accessed Sep 1, 2020)

17) News IBFD, "Ireland - COVID-19 Pandemic: Revenue Provides Guidance on the Accelerated Loss Relief for Companies", 07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07_ie_2 (accessed 20 Aug. 2020)

18) 이때 손실은 소득세법상의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됨(Taxes Consolidation Act, 1997, Section 382)

19)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Section 382

20)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3,542만원임

- 코로나19 봉쇄기간 또는 그 이후 12개월 동안 모든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 부담금과 관련한 납세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첫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감면액을 확대함

-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액을 ① 3만유로(기존 2만유로), ② 주택의 매입가 혹은 준공가의 10%(기존 5%), ③ 제도 도입 4년 전에 납부한 개인소득세와 예금이자소득세의 합계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확대함

■ 개인의 소득세 세액에서 숙박, 음식 및 무알코올 음료 관련 지출의 20%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음²¹⁾

- 거래당 최소 지출은 25유로²²⁾이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지출이 대상이 됨
- 공제 가능한 최대 비용은 625유로²³⁾(부부 1,250유로²⁴⁾로, 이에 따른 최대 공제액은 125유로²⁵⁾(부부는 250유로²⁶⁾)임

- 표준 부가가치세 세율을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23%에서 21%로 한시적으로 인하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 [프랑스 - 2020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7월 31일 DAC6 실행과 관련한 보고의무 기한 연장, 결손금 공제에 의한 세액 즉시 환급, 사업재산세(Contribution Foncière des Entreprises: CFE) 세액공제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3차 수정예산안을 관보에 게재함^{27), 28)}

- 강제적 보고규정과 역외조세약정 교환에 대한 EU 지침(DAC6) 실행과 관련하여 EU 이사회의 보고 기한 연장 권고에 따라 보고의무의 기한을 연장함 - 2018년 6월 25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의 역외조세약정에 대한 보고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1년 2월 28일로 연장함 - 역외조세약정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준비가 되었거나 실행을 위한 첫 단계가 실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의무가 있는 2020년 7월

21) Citizens Information, "Stay and Spend Tax Credit",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money_and_tax/tax/income_tax_credits_and_reliefs/stay_and_spend_tax_credit.html. 검색일자: 2020. 9. 7.

22)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만 5천원임

23)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만 8천원임

24)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5만 1천원임

25)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만 6천원임

26) 2020. 9. 7.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5만 1천원임

27) 프랑스 법률정보시스템,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sessionId=0026D809FE97850366EE547659BF5191.tplgr31s_1?cidTexte=JORFTEXT000042176557&dateTexte=&oldAction=rechJO&categorieLien=id&idJO=JORFCONT000042176554, 검색일자: 2020. 8. 24.

28) News IBFD, "COVID-19 Pandemic: Amending Finance Law Postpones DAC6 Obligations and Provides For Immediate Refund of Loss Carry-Back", August 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04_fr_1.html, (accessed August 24, 2020)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역외조세 약정에 대한 보고시기를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연장함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하여 소급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에 의한 법인세 환급액은 납세자가 특별 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환급 가능함
- 조세일반법 제1639A조를 수정하여 주된 영업활동이 여행업, 호텔업, 요식업, 스포츠, 문화, 항공운송, 행사 개최 등인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공공단체의 협조하에 2020년도 사업 재산세액의 3분의 2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프랑스 -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법인세 등 분할 납부 허용]

- 프랑스 재무부는 2020년 8월 17일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코로나19 위기 기간의 납부세액을 3년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Decree 2020-987)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함^{29), 30)}
- 2019년 이전에 영업활동을 시작한 영세기업(micro entreprises) 및 중소기업(l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 납부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이는 특히 상인, 공예가, 자유직업인³¹⁾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과세제도, 정상 과세제도 등 적용되는 모든 과세제도에 해당함
- 코로나19로 기한이 연장되기 전의 기존 납부기한이 2020년 2월에서 4월이었던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 2020년 3월에서 5월이었던 법인세와 사업재산세에 적용됨
- 기업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12, 24, 36개월 중 하나의 분할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분할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면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독일 - 연례조세법안2020 초안 발표]

- 독일 재무부는 2020년 7월 21일 연례조세법2020 초안을 발표하여 기존 조세법의 일정 부분을 수정함^{32), 33)}

29)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https://www.economie.gouv.fr/covid19-soutien-entreprises/soutien-tpe-pme-plans-de-reglement-dettes-fiscales#>, (accessed August 24, 2020)

30) News IBFD, "COVID-19 Pandemic: France Implements Tax Payment Plans for SMEs", August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20_fr_1.html, (accessed August 24, 2020)

31) 자유직업인이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가 등 자격증이 요구되는 규율 전문직과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번역가 등 비규율 전문직을 의미함(프랑스 공공서비스,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3458>, 검색일자: 2020. 9. 4.)

32)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Gesetzestexte/Gesetze_Gesetzesvorhaben/Abteilungen/Abteilung_IV/19_Legislaturperiode/Gesetze_Verordnungen/2020-07-17-JStG-2020/0-Gesetz.html, (accessed August 24, 2020)

33) News IBFD, "Ministry of Finance Issues Draft Bill for an Annual Tax Act 2020", July 24,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7-24_de_1.html, (accessed August 24, 2020)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패키지(EU VAT e-commerce package)를 실행함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패키지란 용역 공급, 원거리 재화 공급 및 특정 국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EU 2017/2455 및 2019/1995 지침임
- 판매세법 제13b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 부제도(reverse charge)의 적용 대상을 원격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재판매자(reseller)로 확대함
-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사업 자산비용의 최대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산의 50% 이상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소득공제 적용 조건을 완화함
 - 적격 납세자의 정의를 소득활동의 유형에 관계없이 순이익이 12만 5천유로³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단순화함
 - 기존 소득세법 제7g조는 사업 자산비용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자산의 90% 이상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21조와 관련하여 임대소득 산정에서 주거용 주택의 임대료가 시장가치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에 시장가치와 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는 관련 비용으로 소득공제되는데, 이러한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시장가격의 66%에서 50%로 인하함

- 임대료가 시장가격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에 시장가치와 임대료의 차액은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보아, 이를 무상제공 부문과 광고유인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비용으로 소득공제됨
-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이탈리아 -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령 개정]

- 이탈리아는 2020년 8월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조치 법령을 개정함^{35), 36)}
 - 관광 산업 종사하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분까지 상업용지 임대료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함
 - 2020년 3~5월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유예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유예분을 다시 납부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세액의 50%는 2020년 9월 16일부터 4개월 동안 분납이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2021년 1월 16일부터 24개월간 분납이 가능함
 - 일부 코로나19 타격이 심한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2020년 10~12월분 사회보장분담금을 30% 감면함
 - 적격 기업에 대하여 사업장 개조비용 또는 코로

34)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억 7,713만원임

35)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Council of Ministers Approves Further Emergency Measures", Aug 10, 2020, https://research.ibfd.org/data/tns/docs/html/tns_2020-08-10_it_1.html (accessed Sep 1, 2020)

36) News IBFD, "Italy - Italy - COVID-19 Pandemic: Italy Gazettes Law Decree Introducing Further Emergency Measures", Aug 18,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18_it_1 (accessed Sep 1, 2020)



나19 관련 호텔 등 숙박업체 이용비용의 65%에 대응하는 비용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함

- 적격 기업은 10%의 대체세³⁷⁾를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을 제외한 특정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상향하여 계상할 수 있음
-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33% 이상 감소한 기업은 2020년도 소득세 및 지방세(IRAP) 선납 기한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특정 사회보장기여금을 최장 6개월, 연 8,060유로³⁸⁾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음
- 이탈리아 국세청은 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³⁹⁾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그리스 - R&D 지출 관련 세금 인센티브 확대 법안 제출]

■ 그리스 개발투자부는 2020년 7월 13일 R&D 지출

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와 엔젤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함⁴⁰⁾

■ 2020년 9월 1일부터 과학 및 기술 연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의 감가상각을 포함하는 R&D 지출비용에 대해 연구 수행 시점의 사업 총 수입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함⁴¹⁾

- 위 비율에 따른 비용이 총수입액보다 클 경우 동 법 제27조에 따라 이월함
- 공인된 감사인(회계사 및 감사 법인 등)이 기업이 제출한 비용 및 금액의 실현 여부를 국제재무보고표준(IFRS) 및 세법에 따라 관련 감사를 수행함

■ 특정 조건하에서 개인 엔젤투자자가 국가 스타트업 등록부에 등록된 자본 회사에 투자한 자본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⁴²⁾

- 공제되는 투자액은 스타트업당 최대 10만유로⁴³⁾이며, 3개 스타트업의 투자액까지 적용되어 최대 30만유로⁴⁴⁾의 공제가 가능함
- 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이루어지며 투자가 이루어

37) 대체세는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별도의 세목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인지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목에서 일정한 정책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음 (<https://www.soldioggi.it/imposta-sostitutiva-14431.html>, 검색일자: 2020. 9. 4.)

38)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143만원임

39) News IBFD, "Italy - COVID-19 Pandemic: Tax Authorities Provide Further Clarifications on Measures to Relaunch Economy", Aug 21,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0-08-21_it_1 (accessed Sep 1, 2020)

40) News IBFD, "Greece - Increased Depreciation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Expenditure and Tax Incentives for Angel Investors Clarified", 17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7-30_gr_2 (accessed 20 Aug. 2020)

41) 그리스 의회 홈페이지, 개발투자부의 권한에 대한 법률 초안 (Σχέδιο Νόμου του Υπουργείου Ανάπτυξης και Επενδύσεων με τίτλο:) 제46조,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c8827c35-4399-4fbb-8ea6-aebdc768f4f7/11326903.pdf>, 검색일자: 2020.9.1.

42) 그리스 의회 홈페이지, 개발투자부의 권한에 대한 법률 초안 (Σχέδιο Νόμου του Υπουργείου Ανάπτυξης και Επενδύσεων με τίτλο:) 제49조,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c8827c35-4399-4fbb-8ea6-aebdc768f4f7/11326903.pdf>, 검색일자: 2020.9.1.

43)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1억 4,168만원임

44)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억 2,505만원임

어진 과세기간에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 혜택을 먼저 적용해야 함

[벨기에 - 코로나19 관련 급여세 원천징수액의 한시적 감면 시행세칙 발표]

■ 벨기에 재무부는 2020년 8월 6일 급여세 원천징수액의 한시적인 감면에 대한 시행세칙인 Circular 2020/C/103을 발표함⁴⁵⁾

■ 기업의 재무 상황 개선을 위해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감면하여 이를 기업의 자본에 투입할 수 있게 함

- 2020년 6월에서 8월까지 원천징수된 급여세의 월별 총액에서 2020년 5월에 원천 징수된 급여세액 차액의 50%를 감면함⁴⁶⁾
- 여기에서 급여소득은 휴일 수당, 연말 상여금 및 체납 또는 고용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과세 대상 보수를 의미함
- 본 법안에 따라 예상되는 원천징수세 면제 총액은 2천만유로⁴⁷⁾를 초과할 수 없으며,⁴⁸⁾ R&D 관련 기업과 같이 이미 부분적으로 급여세 면세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상기 급여세 원천징수액 감면이 적용됨⁴⁹⁾

- 고용주는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5월 31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연속 기간 동안 임시 실업 조치 수혜자여야 함
 - 이때 30일 연속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됨
-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이 감소하거나 배당금을 배분하지 않아야 함
- 고용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에 직접적인 지분 보유나 지불액이 없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중국 -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 감면]

■ 중국 재무부, 관세청 및 국세청은 2020년 8월 14일 2020년 36호 공고를 통해 세금 감면이 금지되었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45)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Clarifications on Wage Tax Exemption", 20 August,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0_be_1 (accessed 26 Aug. 2020)

46) Deloitte, "COVID-19: Wage withholding tax incentive",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be/Documents/tax/TaxAlerts/IndividualTaxAlerts/COVID-19%20Wage%20withholding%20tax%20incentive.pdf>, 검색일자: 2020. 9. 4.

47)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283억 3,660만원임

48) Projet de Loi: Portant diverses mesures fiscales urgentes en raison de la pandémie du COVID-19 (CORONA III), <https://www.dekamer.be/FLWB/PDF/55/1390/55K1390001.pdf>, 검색일자: 2020. 9. 4.

49) News IBFD, "Belgium - COVID-19 Pandemic: Bill on COVID-19-Related Wage and Income Tax Measures Submitted to Parliament", 3 July, 2020, (accessed 1 Sep. 2020)



를 관련 법에 따라 감면하기로 결정함⁵⁰⁾

● 해당 공고는 2020년 8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규정인 1994년 64호 시의회 공고는 폐지됨

- 과거 1994년 규정은 중국의 국내 제조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으로, 일정 수입 상품의 수입방식이나 수입하는 국가나 기업 등의 조건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세금 감면이 금지되었음

■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수입 상품은 아래와 같음

● 대상 상품은 20개이며 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 또는 생활필수품에 해당함

- 텔레비전,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게임기, 음향기기,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 교환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제어, 초소형 컴퓨터와 주변기기, 전화기, 무선 호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기, 가구, 램프, 조명기구, 식료품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홍콩 - 로열티 소득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해석서 개정]

■ 홍콩 국세청은 2020년 8월 로열티 소득 및 지식

재산권 관련 소득에 대한 해석서를 개정하여 IP 관련 소득의 간주 공급, 로열티 소득의 원천을 정하는 원칙, 적정 간주 수익률 적용,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⁵¹⁾

● 본 지침은 2005년 발표한 국세청 해석서 22호⁵²⁾를 개정하여 구체화한 것임

■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최신 해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홍콩 원천 소득은 공급으로 간주하며 이익세(Profits tax) 과세 대상임

●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로열티 소득을 판단하고자 해당 이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이를 위해 사실관계, 개발된 IP의 허가(Licensing), 구매된 IP 허가, IP의 재허가(Sublicensing) 현황을 분석해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세 대상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홍콩 내 영화 필름의 사용 및 전시
- 홍콩 내부 또는 외부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

- 홍콩 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

- 홍콩 내에서 가치가 증대된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

50) 중국 재무부, http://gss.mof.gov.cn/gzdt/zhengcefabu/202008/t20200813_3566883.htm, 검색일자: 2020. 9. 4.

51) Hong Kong - Hong Kong Updates Guidance on Tax Treatment of Royalties and IP-Related Income (13 Aug. 2020), News IBFD (accessed 25 Aug. 2020)

52) 홍콩 국세청, <https://www.ird.gov.hk/eng/pdf/dipn22.pdf>, 검색일자: 2020. 8. 25.

- 공연자 저작권의 할당
-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 로열티 소득은 일반적으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됨
- 해당 로열티 소득의 소득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상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이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인도 - 알기 쉬운 과세 플랫폼 도입]

- 인도 정부는 2020년 8월 14일 “알기 쉬운 과세”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위한 세무행정 절차를 도입함⁵³⁾
 - 알기 쉬운 과세 플랫폼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세무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도입함
 - 비대면 조사, 비대면 불복 및 납세자 현장의 내 용을 다루고 있음
- 인도 직접세 중앙위원회(the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는 소득세법 119조를 발행하여 2020년 8월 13일부터 비대면 조사 규정이 도입됨
 - 비대면 조사 도입을 통해 세무조사 절차를 단순 화하고, 납세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납세자와 국세청 담당 직원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지남
 - 단, 아래의 경우는 비대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수색 및 압수 조치에 해당하는 중앙위원회에 서 할당한 조사 명령
- 국제조세 케이스에 해당하는 조사 명령(단, 중 앙위원회에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불복 절차는 2020년 9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임

- 단, 해당 내용은 향후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납세자 현장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2020년 8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함⁵⁴⁾
 - 납세자 현장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됨
 -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세관청의 의무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정하고 정중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 정직하게 대해야 함
 - 납세자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함
 - 정확한 금액만을 징수해야 함
 - 납세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
 - 납세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절차를 정직하게 준수해야 함
 - 정확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53) India - India Launches Transparent Taxation Platform (14 Aug. 2020), News IBFD (accessed 25 Aug. 2020)

54) EY, https://www.ey.com/en_gl/tax-alerts/india-introduces-transparent-taxation-platform, 검색일자: 2020. 9. 1.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함

- 법에 따른 정보를 적시에 제출해야 함
- 세금을 적시에 납부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싱가포르 -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발표]

■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0년 8월 5일 2020년도 예산안⁵⁵⁾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⁵⁶⁾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⁵⁷⁾

-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 특례를 명확히 하며,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코로나19 피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아래와 같음

- 2020년도 법인소득세 납부세액의 25%를 1만 5천싱가포르달러⁵⁸⁾의 한도 내에서 감면함
- 결손금 소급공제의 기준을 기존 직전 1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함
- 개인 또는 사업자가 2020년도에 받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2021년, 2022년 소득세 계산 시

면제됨

- 적격 종업원이 2020년도에 숙박, 음식, 교통 등 생필품을 위해 제공받은 복리후생은 소득세 계산 시 면제됨
- 2020년도 공장 및 기계장치 취득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가속상각할 수 있음
- 2020년도 리노베이션, 재정비 등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가속상각할 수 있음
- 비거주자 중개인에게 2022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는 비용은 원천징수가 면제됨

■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기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득세 최고 책임자는 조세회피 목적의 계약에 대한 대응조정의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50%의 추가 과징금을 징수함
- 조세 환급 절차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제함
- 은행과 적격 기업에 대한 채무 및 채무증권의 충당부채 관련 비용공제 한도가 폐지됨
- 2022년 6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회사의 보통주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을 과세하지 않음(단, 부동산 관련 사업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다운 회계사>

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3호, 2020 참고

56) 싱가포르 재무부, <https://www.mof.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2020-itabill/itabill2020-entire-bill9669b991d63d4291a4a488a5c0a7df01.pdf>, 검색일자: 2020. 8. 25.

57) Singapore - Singapore Announces Proposed Amendments to Income Tax Act (05 Aug. 2020), News IBFD (accessed 1 Sep. 2020)

58)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1,309만원임

[EU - 조세회피방지지침 이행 관련 보고서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8월 19일 EU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이행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59), 60)}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자비용공제

규정,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하 ‘GAAR’), CFC 규정 이행 여부에 관하여 개관하고 있음

- EU는 ATAD의 국내법 도입 시 회원국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선택 내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GAAR에 관해 EU가 회원국들에 별도로 제시

<표 1> 이자비용공제규정 관련 도입 현황

(단위: 국가수)

내용	세부 내용	
	EBITDA의 30%	EBITDA의 30% 미만
공제 가능 한도(2.1.a)	22	1
최소 기준/세이프 하버 적용 여부 (2.1.b)	300만유로 ¹⁾	300만유로 미만
	16	6
비관계기업 공제 가능 한도(2.1.c)	독립기업 면제 허용	독립기업 면제 비허용
	9	18
ATAD 도입 이전 거래 소급 적용 여부(2.1.d)	2016. 6. 17. 이전 대출 제외	2016. 6. 17. 이전 대출 포함
	9	11
공공 인프라 관련 대출 거래 포함 여부(2.1.e)	제외	포함
	16	11
연결대상 종속기업 추가 시 공제 한도 증가방식(2.1.f)	Equity escape 허용	Group ratio rule 허용
	8	6
이월공제 가능 기간(2.1.g)	기간 제한 없음(option g.1)	5년 제한(option g.3)
	20	1
금융거래 포함 여부(2.1.h)	제외	포함
	17	10

주: 1) 2020. 9. 1. 원화 기준 환산 시 약 42억 5천만원임
출처: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20/EN/COM-2020-383-F1-EN-MAIN-PART-1.PDF>, 검색일자: 2020. 9. 1.

59) News IBFD, “European Union - European Commission Issues First Implementation Report on ATAD”, Aug 20, 2020,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0-08-20_e2_1 (accessed Sep 1, 2020)
60)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20/EN/COM-2020-383-F1-EN-MAIN-PART-1.PDF>, 검색일자: 2020. 9. 1.



<표 2> CFC 규정 관련 도입 현황

(단위: 국가 수)

내용	세부 내용			
	특정 유형의 소득 대상(Option A)		인위적으로 자회사/PE에 이전된 소득 대상(Option B)	
규정방식(2.2.a)	16		10	
Option A: 비유럽국가에 적용 범위 확장 여부(2.2.b)	제3국으로 확장		EU 회원국으로 제한	
	10		5	
Option A: 대상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CFC 제외 규정 (2.2.c)	도입		미도입	
	12		3	
Option A: 일정 금액 미만의 금융거래 구조를 CFC에서 제외(2.2.d)	제외함		제외하지 아니함	
	5		10	
Option B: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 scope에서 제외하는 규정(2.2.e)	도입		미도입	
	7		3	
광의의 CFC 정의 규정(2.2.f)	CFC 정의 확장		CFC 정의 확장 규정 미도입	
	17		10	
화이트/블랙/그레이 리스트 이용 여부(2.2.g)	White list	Black list	White+Black list	미채택
	1	7	1	18

출처: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20/EN/COM-2020-383-F1-EN-MAIN-PART-1.PDF>, 검색일자: 2020. 9. 1.

한 옵션이 없음

- 집행위원회는, 4개 회원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이 이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위 4개 회원국들에 2020년 8월까지 그 이행을 촉구함
- 회원국들은 2018년 말까지 이자비용공제규정, GAAR, CFC 관련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한

후 이를 EU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 1월까지 출국세와 혼성불일치규정 등의 이행 여부 평가 등을 모두 반영한 전반적인 평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라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도연 변호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15개 회원국에 814억유로를 지원하는 SURE 고용 지원 프로그램*안을 이사회에 제출 (2020. 8. 24.)^{1), 2)}

* SURE(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회원국의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한 EU 차원의 임시 조치임. 회원국의 단기 고용정책을 지원하여 일시적인 경제충격이 회원국의 경제 및 노동시장에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원 대상 정책)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단시간 근로제의 신설 혹은 연장, 자영업자 대상의 유사 조치 등 회원국 차원의 고용정책을 지원하며, 회원국의 공공지출 급증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단시간 근로제(short-time work schemes)는 특정한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 사용자에 의해 임금의 삭감과 함께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³⁾

- 모든 EU 회원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단시간 근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⁴⁾

- (재원) 금융시장에서 EU 집행위가 EU 예산과 회원국의 보증을 기초로 차입을 통해 조달하며, 회원국은 최소 보증금액(최대 1천억유로 대출금액의 25%) 250억유로이며, 국가별 보증 비율은 2020년 EU의 총국민소득에 비례

- (지원 형식) EU의 높은 신용등급과 낮은 차입비용 등 유리한 조건의 대출 형태

- SURE 프로그램 지원안의 회원국별 규모

- (10억유로 이상) 이탈리아 274억유로, 스페인 213억유로, 폴란드 112억유로, 벨기에 78억유로, 루마니아 40억유로, 그리스 27억유로, 체코 20억유로, 슬로베니아 11억유로, 크로아티아 10억유로

1) EU 집행위, 'Coronavirus: Commission proposes to provide 181.4 billion in financial support for 15 Member States under SURE', 2020. 8. 2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496, 검색일자: 2020. 8. 25.
 EU 집행위, 'SURE(Supporting Member States to help protect people in work and job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sure_factsheet.pdf, 검색일자: 2020. 8. 25.
 EU 집행위, 'Coronavirus: the Commission mobilises all of its resources to protect lives and livelihoods', 2020. 4. 2.,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conomy-finance/sure_factsheet.pdf, 검색일자: 2020. 8. 31.
 EU 이사회, 'COVID-19: Council adopts temporary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SURE)', 2020. 5. 1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0/05/19/covid-19-council-reaches-political-agreement-on-temporary-support-to-mitigate-unemployment-risks-in-an-emergency-sure/>, 검색일자: 2020. 8. 31.

2) EU 집행위, 'Questions and answers: Commission proposes SURE, a new temporary instrument worth up to 100 billion to help protect jobs and people in work', 2020. 4. 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572, 검색일자: 2020. 8. 31.

3) 이승현, 「코로나19 관련 독일의 지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p. 78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ctListNo=9358&key=21>

4)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자료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 단시간 근로제 혹은 그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코로나19 이후 도입한 국가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중 예시로 독일과 프랑스의 단시간 근무제 관련 제도 운용은 다음과 같음



- (10억유로 이하) 슬로바키아 6억 3,100만 유로, 리투아니아 6억 200만유로, 불가리아 5억 1,100만유로, 키프로스 4억 7,900만 유로, 몰타 2억 4,400만유로, 라트비아 1억 9,200만유로
- (지원 절차) 회원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집행위와 당사국의 협의를 거쳐 집행위는 대출 조건과 규모 등을 결정한 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 시 실행
 - 구체적으로 회원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집행위는 단시간 근로제의 신설·연장, 자영업자 대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공지출 증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협의하고, 협의를 통해 대출의 조건과 규모, 만기 등을 결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선임연구원>



IMF

- IMF, “2020 대외부문 보고서: 글로벌 불균형(imbalances)과 코로나19 위기” 발간(2020. 8.)⁵⁾
 - 전 세계 종합수지(overall balance)⁶⁾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소폭 감소해 왔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2%p 감소하여 2.9%로 하락
 - (석유 수출국) 유가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 감소
 - (유로지역) 서비스 및 투자 수익 수지(service and investment income balance) 악화로 유로지역 흑자는 GDP 대비 0.4%p 감소하여 2.7%에 달함
 - (중국) 경기둔화, 상품 및 반도체 수입가격 하락, 관세 인상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2019년 경상수지는 1.0%로 전년에 비해 0.8%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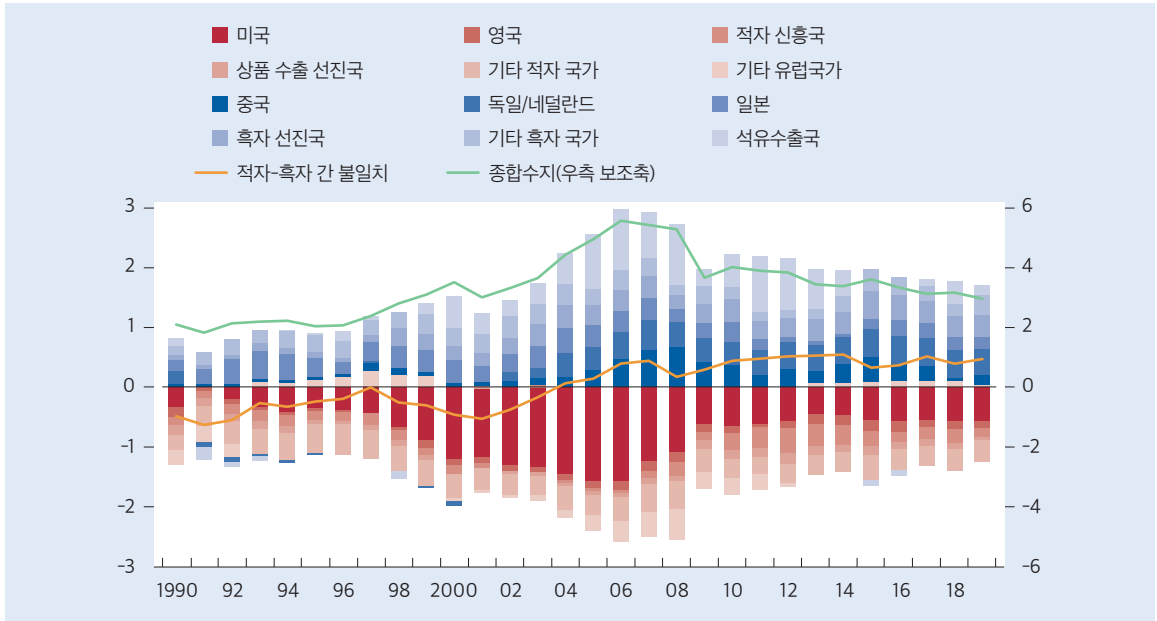
- 독일(Short-time work scheme)
 - 자격: 경제적 이유 혹은 불가피한 상황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우
 - 지원규모: 근무시간 단축으로 감소한 세후소득의 60%(자녀 1명 이상 있는 경우 67%)를 지원하고, 2018년 월 상한으로 서독일에서 6,500유로, 동독 일에서는 5,800유로로 설정
 - 지원기간: 12개월로 제한되며, 예외적인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조치: 2020년 3월 채택된 법안을 통해 2020년 3월~2021년 12월까지 임시 조치 시행
 - ① 노동력의 10%가 영향을 받는 경우 단시간 근무제 보상 지급(이전: 1/3 이상 영향을 받아야 함)
 - ② 사회보장기여금의 일부 혹은 전체를 고용주가 아닌 연방고용기관(Federal Employment agency)에서 부담
 - ③ 임시 기구 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s)에게도 단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
 - 단체협약을 통해 영화산업(세후소득의 100%), 금속가공(세후소득의 80~97%), 화학(세후소득의 90%), 자동차 관련(세후소득의 90%) 등 산업별로 지원 비율이 상이
- 프랑스[partial unemployment scheme (Activité partielle)]
 - 자격: 경제 상황, 자연재해, 기타 예외적인 상황 등으로 경제활동의 감소 또는 일시적인 정지
 - 지원규모: 근로자의 총시간당 임금의 70%(하한: 법정최저임금, 훈련 중인 근로자는 순 시간당 임금의 100%)
 - 지원기간: 최대 6개월(1회 갱신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조치: 2020년 3월 채택된 법안을 통해 3월 26일부터 다음 사항으로 변경
 - ① 최저임금의 4~5배 상한선까지 임금청구서의 100%를 정부가 부담
 - ② 파트타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월 보수 권리를 가짐, 견습생은 월 보수의 100%지급
 - ③ 연간 고정일 혹은 고정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직업은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partial unemployment'의 자격을 가짐
 - ④ 'partial unemployment'의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Short Time Work Measures Across Europe', 2020. 3. 31., https://www.etuc.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file/2020-04/Covid_19%20Briefing%20Short%20Time%20Work%20Measures%2031%20March.pdf, 검색일자: 2020. 9. 1.

5) [https://www.imf.org/en/Publications/ESR/Issues/2020/07/28/2020-external-sector-report\(2020. 8.\)](https://www.imf.org/en/Publications/ESR/Issues/2020/07/28/2020-external-sector-report(2020. 8.))

6) 전체 흑자와 적자의 절댓값의 합(the absolute sum of all surpluses and deficits)을 의미함

[그림 1] 1999~2019년 경상수지

(단위: 세계 GDP 대비 %)



- 주: 1. 적자 신흥국(deficit EMs)에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터키
- 2. 상품 수출 선진국(AE commodity exporters)⁷⁾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 3. 흑자 선진국(surplus AEs)에는 홍콩, 한국,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대만
- 4. 석유 수출국(oil exporters)에는 WEO에서 정의하는 국가들과 노르웨이가 해당됨
- 5. 기타 적자(흑자) 국가는 경상수지가 적자(흑자)를 보이는 나머지 모든 국가를 포함함

출처: IMF, 2020 External Sector Report, Figure 1.1.

- (미국 및 일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0.1%p 감소한 2.3%에 달하며,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6%로 유지
- (코로나19 영향) 전 세계 교역량의 급격한 감소와 금융조건 악화 야기
 - (무역량 감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상품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융위기 초기 5개월보다도 더 급감한 수치임
 - 주요 요인에는 봉쇄 조치 외에도 생산량 감소, 실직자 증가, 소득 감소와 같은 수요 위축이 있음
- (금융조건 악화) 2월과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우려 및 경제적 충격 증가로 금융시장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외부 자금조달 여건(external financing conditions)이 악화됨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에 의해 측정된 주가의 예상 변동성

7) 상품 수출국이란 석유, 가스, 금속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규모의 20%를 넘거나 재정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51개국을 의미함



(expected equity price volatility)은 금융 위기 당시 포착되었던 최고 수준에 도달

- (정책 제언)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정책 추진이 필요
 - (피해 극복 및 경제 회복)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결과 봉쇄 조치로 가계 및 기업이 가지는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보건 위기가 진정되고 경제가 재개되기 시작하면,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투자를 늘리고 가계소비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 정책 실시
 - (자본유출 관리) 변동환율제(flexible exchange rate)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환율 변동이 외부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해야 함
 -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자본유출 관리방안⁸⁾이 사용될 수 있으나,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위기 상황 완화와 함께 종료되어야 함
 - (외부효과 대응) 코로나19 위기 해결에는 강력한 다자간 협력이 요구됨
 - 국제통화기금은 긴급차관제도(rapid credit facility)와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등 각종 대출제도를 적극 사용하여 취약국에 자금을 지원
 - (무역규제 철폐) 무역은 필수 의료장비 생산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련하여 새롭게 생긴 규제들은 철회되어야 함

- (한국 경제 평가) 2019년 한국의 대외 포지션⁹⁾은 중기 기초경제 여건(fundamentals)과 바람직한 정책(desirable policies)이 제시하는 수준에 대체로 부응함
 - (정책 제언) 한국 정부는 광범위한 재정·통화 정책을 일시적으로 실시하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함
 - 확장적 재정정책 및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은 지속되어야 하며, 투자 확대 유도, 기업의 진입·투자 장벽 축소, 비제조업 부문의 규제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
 - 환율의 변동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필요시 제한적으로 실시
- <자료 수집 및 정리: 배소민 선임연구원>



OECD

■ OECD 차입 전망 보고서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0* 발표(2020. 7. 29.)¹⁰⁾

- (현황)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각국의 재정부양책은 정부 차입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킴
 - OECD 회원국이 2020년 1~5월까지 발행한 정부채권 총액은 11조달러로, 지난 5년 동기 평

8) 자본유출 관리방안은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① 거주자의 해외투자 및 송금에 대한 제한, ② 비거주자의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제한, ③ 거주자 여부와 무관한 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보다 우선될 수 없음

9) 대외 포지션은 대외자산 및 대외부채에서의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 투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를 의미하며 국가별 상이한 비율이 해당 국가의 대외 포지션으로 여겨짐

10)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oecd-sovereign-borrowing-outlook_23060476

균 대비 약 70% 증가

- (전망) OECD 회원국의 2020년 총차입 수요는 28.8조달러로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전망치 대비 6.6조 달러(30%) 증가한 수치임
 - 중앙정부 시장성 채무¹¹⁾는 52.7조달러 전망됨 (2019년 47조달러),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 전망치 대비 3.5조달러 증가한 수치임
 - 차입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GDP 감소로 인해 GDP 대비 중앙정부 시장성 채무 비율은 2020년 약 86%로 전년 대비 13.4%p 증가 전망,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 Korea 2020* 발표(2020. 8. 11.)¹²⁾

- (경제) 코로나19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야기, 특히 여행 및 레저 관련 산업의 충격이 심각한 편이며 고용 위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전망) 경기는 점차 정상화되었으나,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 하더라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2차 확산 미발생) GDP 성장률, 2020년 -0.8%, 2021년 3.1%
- (2차 확산 발생) GDP 성장률, 2020년 -2.0, 2021년 1.4%

※ [참고] 2020년 6월 *OECD Economic Outlook* 기준, GDP 성장률 전망치

- (2차 확산 미발생) 2020년 -1.2%, 2021년 3.1%
- (2차 확산 발생) 2020년 -2.5%, 2021년 1.4%

-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매우 확장적인 상황으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탄한 재정여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권고) 코로나19 충격 완화,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포용성 향상, 기술 확산 촉진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표 1> 참고)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선임연구원>

11) marketable debt: 시장성*이 있는 채무

* 가격의 안정으로 유가 증권 따위가 언제든지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유통성. 또는 어떤 재화나 용역의 판매로 이윤이 생길 가능성

12)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korea-2020_2dde9480-en<https://www.oecd.org/newsroom/korea-keep-supporting-people-and-the-economy-until-recovery-fully-under-way.htm>



<표 1> OECD 주요 권고사항

코로나19 충격 완화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지원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 •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계획 수립 • 5G 인프라, 인공지능 등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해 투자 •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과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사회보험 준수를 강화 • 구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공공 고용 서비스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원을 조정 •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계획된 상병수당제도¹⁾ 도입을 추진하되 근로자의 재할과 업무 복귀에 초점을 둘 것 • 향후 정년 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 확대 등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포용성 향상	기술 확산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급여의 추가 인상 및 절대빈곤 노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 •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임금격차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샌드박스²⁾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가 과도한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 • 환자 안전 담보 및 의료의 질 향상과 양립할 수 있는 한, 원격의료로 촉진 • 성장과 혁신,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R&D 및 신기술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 바우처 제공 • 중소기업 근로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 ICT 수업을 실시 • 중소기업 관리자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주: 1) cash sickness benefit: 질병 등의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2) regulatory sandboxes: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업자에게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제도

출처: OECD, *OECD Economic Survey: Korea 2020*, 2020, p. 13.



미국

[예산·결산 등]

■ 미 트럼프 대통령, 추가 종합경제 부양책 행정명령 서명(2020. 8. 8.)¹³⁾

- (배경) 상원 공화당에서 제시한 “HEALS Act¹⁴⁾”

정책안이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총비용 약 1,65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행정명령에 서명함

* HEALS Act: 보건(Health), 경제지원(Economic Assistance), 책임보호(Liability Protection), 학교(Schools) 등의 지원책이 포함된 상원 공화당이 제안한 종합 경기부양법안

- (행정명령 정책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총 4가지 항목 ① 특별 실업수당 연장 ② 피고용인의

13) CRFB, <http://www.crfb.org/blogs/how-much-would-president-trumps-executive-orders-cost>

14)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7월 1호, 2020 참조

- 급여세 유예 ③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④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함
- (특별 실업수당 연장) 긴급재난지원금 (Disaster Relief Fund)을 통해 기존에 지급한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600달러/week)를 400달러로 조정하여 지급
- (피고용인의 급여세 유예) 연 소득 1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1일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현재 6.2%의 사회보험급여세 징수 유예¹⁵⁾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기간 연장(연장기간: 9. 30.~12. 31.)
-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동 정책의 실행을 위해 재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HUD¹⁶⁾)는 주택 소유주(임대인)와 임차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게 됨

■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6개의 분야¹⁷⁾로 구성된 FY2021 부분세출예산안(H.R. 7617) 통과 의결 (2020. 8. 12.)¹⁸⁾

-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minibus 법안은 총 1.3조달러 규모이며, ① 통상·사법·과학 ② 국방 ③ 에너지·수자원 ④ 재무 ⑤ 노동·보건·교육 ⑥ 교통·주택·도시개발로 구성되어 있음
- 니타 로위(Nita M. Lowey) 하원 세출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공중보건, 교육, 직업교육, 군인 및 군인가족 등을 위한 강력한 예산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도 편성되어 있음을 언급
- 이후, 동 법안은 상원 심의 및 표결 과정을 남겨 놓고 있으며, 예산규모 조정(변동)도 가능함

<표 2>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지원책 항목

(단위: 억달러)

구분	예산
특별 실업수당 연장 지급	440
사회보험급여세 유예	1,000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200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 지원 관련 검토 및 확인 등	0
합계	1,650

출처: CRFB, How much would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s cost, 2020. 8. 8.

15) 피고용자와 같은 세율(6.2%)로 부과되는 고용자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세 징수는 이미 유예되고 있는 상태

16)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7) ① 통상·사법·과학(Commerce-Justice-Science) ② 국방(Defense) ③ 에너지·수자원(Energy and Water Development) ④ 재무(Financial Service and General Government) ⑤ 노동·보건·교육(Labor-Health and Human Services-Education) ⑥ 교통·주택·도시개발(Transportati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8)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ix-bill-appropriations-minibus>



[기타]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0년 7월 고용 통계 발표(2020. 8. 7.)¹⁹⁾

- (가계조사) 2020년 7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9%p 하락한 10.2%로 집계됨
- (사업체 조사) 7월 비농업 임금노동자(nonfarm payroll employment)는 전월 대비 176만명 증가한 1억 3,958만명으로 집계됨

■ 미 의회 하원, 미국을 위한 배달법(Delivering for America Act; H.R. 8015) 통과 의결 (2020. 8. 22.)

* (8. 11.) 법안 발의 → (8. 22.) 257:150 가결

- (배경) 코로나19 우려로 투표장 접근을 꺼려하는 유권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며, 제기된 대선 우편투표 가능성에 대해 행정부에서 미 우정국(USPS²⁰⁾의 현 운영체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원 민주당 주도로 동 법안을 발의함²¹⁾
- (법안 주요 내용) 동 법안은 기본적으로 선거 우편 절차를 도입·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우정국의 운영 및 현 서비스 수준을 축소할 수 있는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무 지침 개정

- 전국적인 업무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적 업무 본질 변경
- 우체국 및 관련 시설 통합·폐쇄 및 운영시간
- 우정국 임직원의 추가 업무 또는 추가 수당 지급의 제한 또는 금지
- 공중 우체통 제거 및 축소
- (법안 비용) 의회예산처(CBO)에서 발표한 ‘H.R. 8015 법안’의 예산(순)적자규모는 3년(FY2020~FY2022) 동안 약 250억달러로 추산²²⁾

■ 미 연방준비제도(Fed), 새로운 장기목표와 통화정책 전략 발표(2020. 8. 27.)²³⁾

- 미 연방준비제도는 장기목표와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성명서(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²⁴⁾에서 통화정책 목표로 완전 고용을 더욱 강조하고, 고용 판단 지표로 완전 고용으로부터의 편차가 아닌 부족(shortfall)을 반영하기로 함
 - 과거 확장기 때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상승 없이 견고한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상승 혹은 기타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한 높은 수준의 고용은 정책적 우려 대상이 아님을 밝힘²⁵⁾
- 인플레이션 목표를 장기간(over time) 평균 2%

19)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2020. 8. 7.,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nr0.htm>

20)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21) 오레곤주의 경우, 1998년에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회의원 선거에 우편투표 공식 도입

22) CBO, <https://www.cbo.gov/system/files/2020-08/hr8015.pdf>, 검색일자: 2020. 8. 31.

23) Fed,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announces approval of updates to its Statement on Longer-Run Goals and Monetary Policy Strategy, 2020. 8. 27.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00827a.htm>

24) 통화정책 전략과 접근방식을 대중에게 명확히 설명하고자 2012년 발표 후 매년 재확인인 거친 성명서. 2019년부터 포괄적 공개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번 개정에서 매년 검토를 거쳐 5년마다 공개 검토를 하기로 변경

25) Fed, Review of Monetary Policy Strategy, Tools, and Communications: Q&As, 2020. 8. 27.

로 설정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하회한 후에는 한동안(some time) 완만하게 2% 이상 도달하도록 정책을 운용

- 정책 금리가 과거보다 실효 하한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미 연방준비제도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시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장준희 선임연구원>



일본

[기타]

■ 통계청, 노동력조사 2분기 평균 발표(2020. 8. 11.)²⁶⁾

- 취업자(6,641만명)는 전년 동기 대비 78만명 감소하였으며, 임원을 제외한 고용자(5,579만명) 또한 감소함(전년 동기 대비 57만명 감소)
 - 정규직은 3,54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만명 증가하였으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임
 - 비정규직은 2,036만명으로 88만명 감소하여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정규직 비율 또한 36.5%로 2분기 연속 감소
- 취업자 6,641만명 가운데 추가 취업희망 취업자는 26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만명 증가

- 실업자는 21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명 증가

- 실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9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증가
-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55만명으로 4만명 증가

- 비노동력 인구는 4,20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만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취업 희망자는 304만명으로 31만명 감소

* 취업 희망자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적당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10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명 증가함

- 비노동력 인구 4,204만명 중 잠재노동력 인구²⁷⁾는 52만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만명 증가함

■ 내각부, 2020 2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0. 8. 17.)²⁸⁾

- 2020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7.8%(연율 △27.8%)이며, 명목GDP 성장률은 △7.4%(연율 △26.4%)로 나타남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4.8%,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수출-수입)이 △3.0%이며, 명목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는 △5.5%,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수출-수입)은 △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review-of-monetary-policy-strategy-tools-and-communications-qas.htm>

26) 통계청, <http://www.stat.go.jp/data/roudou/sokuhou/4hanki/dt/pdf/gaiyou.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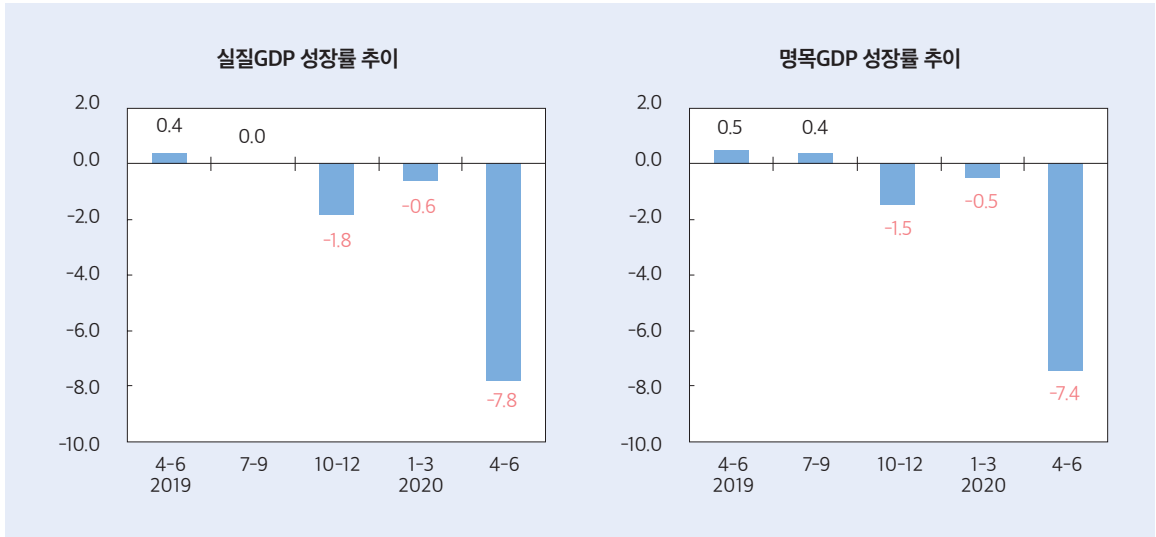
27) 비경제활동인구 중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당장은 아니지만 2주 이내에 취업 가능한 자(확장 구직자) ②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바로 취업 가능한 자(취업 가능 비구직자)

28) 내각부,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gaiyou_top.html,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그림 2] 실질GDP 성장률 및 명목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출처: 내각부, 「2020년4~6월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1p, 2020. 8. 17.,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1.9%로 나타남

- (민간수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Δ 8.2%(1분기는 Δ 0.8%), 명목 Δ 8.4%(1분기는 Δ 0.8%)이며, 이 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Δ 8.6%(1분기는 Δ 0.8%) 명목 Δ 8.8%(1분기는 Δ 0.9%)로 나타남. 민간주택은 실질 Δ 0.2%(1분기는 Δ 4.2%), 명목 Δ 1.4%(1분기는 Δ 4.3%), 민간기업설비는 실질 Δ 1.5%(1분기는 1.7%), 명목 Δ 3.0%(1분기는 1.3%), 민간재고변동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Δ 0.0%(1분기 기여도는 Δ 0.1%), 명목 Δ 0.1%(1분기 기여도는 Δ 0.0%)로 나타남
- (공적 수요)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실질 Δ 0.3%(1분기는 0.0%), 명목 Δ 1.2%(1분기는 0.8%)로 나타났으며,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실

질 1.2%(1분기는 Δ 0.5%), 명목 0.5%(1분기는 Δ 0.4%), 공적재고변동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Δ 0.0%(1분기 기여도는 0.0%), 명목 Δ 0.0%(1분기 기여도는 0.0%)로 나타남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의 수출은 실질 Δ 18.5%(1분기는 Δ 5.4%), 명목 Δ 21.4%(1분기는 Δ 5.5%), 재화·서비스의 수입은 실질 Δ 0.5%(1분기는 Δ 4.2%), 명목 Δ 10.3%(1분기는 4.3%)로 나타남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계절조정이 전 분기 대비 0.5%(1분기는 0.1%), 원계열이 전년 동기 대비 1.5%(1분기는 0.9%)의 신장률을 보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정은 선임연구원>



독일

[기타]

■ 연방 통계청, 독일 2020년 2사분기 GDP 확정치 발표(2020. 8. 25.)²⁹⁾

- 2020년 2사분기 독일의 GDP 성장률은 지난 2020년 7월 30일 속보치(-10.1%) 대비 0.4%p 상승한 -9.7%로 집계되었고, 이는 1970년 독일의 분기별 GDP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임³⁰⁾

- 2020년 2사분기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전 분기 대비 10.9% 급감했으며 기계·장비 총고정자본형성은 19.6% 하락하였음
- 수출은 전 분기 대비 20.3% 감소하였고 수입은 16.0% 감소하는 등 지난 2009년 1분기 금융위기(수출: -11.0%, 수입: -5.9%) 때보다 감소폭이 큼
- 2020년 2사분기 취업률은 4,470만명을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동 분기 대비 57.4만명(1.3%) 감소한 수치임

<표 3> 독일 GDP 성장률 추이(전 분기 대비)

(단위: %)

구분	2019				2020	
	1Q	2Q	3Q	4Q	1Q	2Q
GDP 성장률	0.6	-0.5	0.3	0.0	-2.0	-9.7
소비	1.0	0.1	0.6	0.1	-1.7	-7.3
가계최종소비지출	0.9	0.0	0.3	0.1	-2.5	-10.9
정부최종소비지출	1.3	0.3	1.4	0.3	0.6	1.5
총고정자본형성	1.5	-0.4	-0.1	-0.2	-0.5	-7.9
건설	2.6	-1.0	0.3	0.4	5.1	-4.2
기계장비	1.0	0.0	-1.4	-2.0	-7.3	-19.6
내수	0.3	0.1	-0.3	0.3	-1.4	-7.2
수출	1.6	-1.6	1.3	-0.3	-3.3	-20.3
수입	0.9	-0.4	0.0	0.3	-1.9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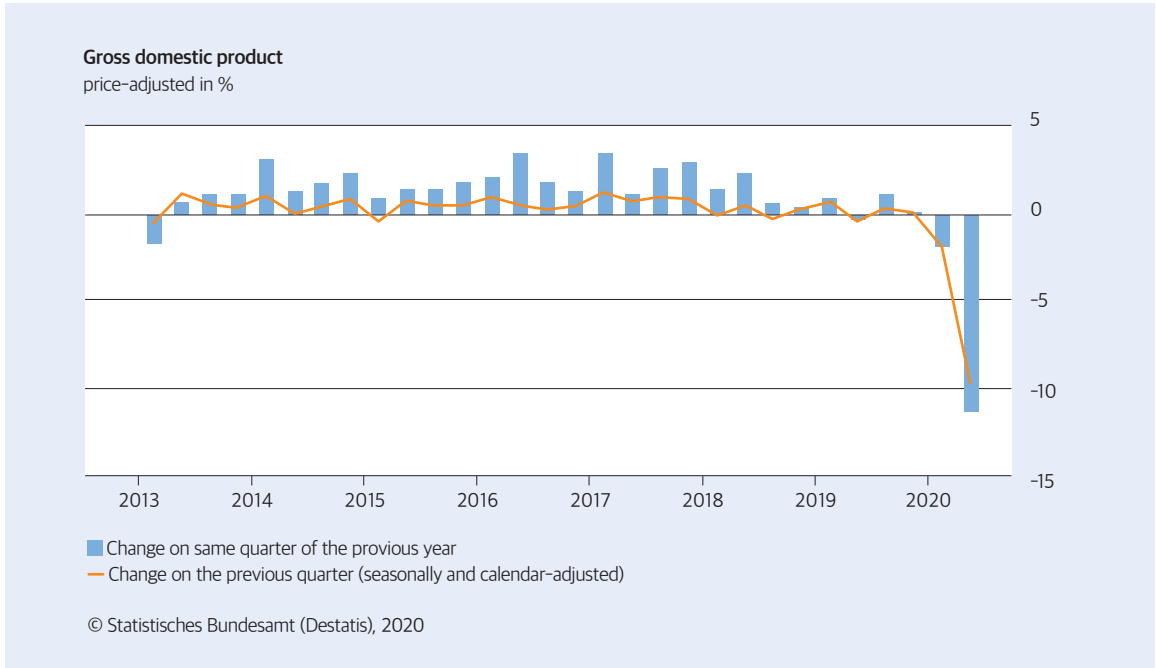
주: 연쇄가격조정, 계절조정 적용
출처: 연방 통계청, Press release, 2020. 8. 25.

29) 연방통계청, press, press releases, 2020. 8.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08/PD20_323_811.html
30) 2008년 금융위기 시기 -4.7%를 기록한 바 있음



[그림 3] 독일 GDP 성장률 추이(2013~2020 Q2)

(단위: %)



주: 연쇄가격조정, 계절조정 적용
출처: 연방 통계청, Press release, 2020. 8. 25.

■ 연방통계청, 2020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적자 발표(2020. 8. 25.)³¹⁾

- 독일의 2020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일반정부 세입 7,667억유로, 지출 8,183억유로로 집계되어 GDP 대비 3.2%(516억유로) 규모의 적자 기록³²⁾
- 2020년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271억유로, 주정부 102억유로, 사회보장기금 78억유로, 지방자치단체 64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함

- 세입 측면에서 일반정부 세입은 전년 동 기간 대비 -8.1% 감소하였으며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경상세(-10.2%), 법인세·무역세(-26.8%)의 하락세가 크게 나타남
- 지출 측면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긴급구호비 지출이 177.5% 증가하였고, 사회적 현물 이전 외 사회급여 규모는 단기간 근로자 증가에 기인하여 6.7% 증가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선임연구원>

31) 연방통계청, press, press releases, 2020. 8.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0/08/PD20_324_813.html

32) 2019년 상반기 GDP 대비 2.7% 흑자



프랑스

전년 동기보다 69억유로 악화

[예산·결산 등]

- 2020년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 발표(2020. 8. 4.)³³⁾
 - (재정수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0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1,249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73억유로 악화됨
 - (지출) 재정지출은 1,985억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243억유로 감소
 - 실업지원 조치에 135억유로, 기업지원 조치에 49억유로 등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
 - (수입) 재정수입은 1,258억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169억유로 감소
 -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44억유로 감소한 1,208억유로
 - (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236억유로로

[기타]

- 프랑스 통계청, 2020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13.8% 발표(2020. 7. 31.)³⁴⁾
 - 프랑스의 GDP 성장률이 2020년 1분기 -5.9%에 이어 2분기에는 -13.8%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9%로 나타남
 - 3월 중순과 5월 초 사이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으로 경제활동이 급감함
 - 경제활동은 4월 최저점에 도달하였고, 5월 이후 점진적 회복세를 보임
 - 가계소비 지출은 -11.0% 감소, 총고정자본형성은 -17.8% 감소함
 - 수입(-17.3%)보다 수출(-25.5%)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대외무역의 GDP 기여도는 -2.3%로 나타남

<표 4> 2020년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증감률
재정지출(Dépenses)	204,384	230,554	12.8
재정수입(Recettes)	143,774	129,266	-10.1
일반회계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60,610	-101,287	-67.1
특별회계 재정수지(Solde des comptes spéciaux)	-16,728	-23,591	-41.0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77,338	-124,878	-61.5

출처: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20 (2020. 8. 4.)

33)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files/files/publications/SMB/SMB%202020/situation_mensuelle_budget_Etat_30_juin_2020.pdf

34) 프랑스 통계청(INSEE), In Q2 2020, GDP shrank by 13.8%, 2020. 7. 3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4639759>



<표 5>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¹⁾

(단위: 전분기 대비 %)

구분		2019 Q3	2019 Q4	2020 Q1	2020 Q2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		0.2	-0.2	-5.9	-13.8	-19.0
가계소비		0.4	0.3	-5.8	-11.0	-15.6
정부소비		0.5	0.5	-3.5	-8.0	-10.3
총고정자본형성 ²⁾		1.2	0.2	-10.3	-17.8	-25.2
수출		-0.5	-0.8	-6.1	-25.5	-30.9
수입		0.6	-0.7	-5.5	-17.3	-21.9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0.6	0.3	-6.4	-12.0	-16.8
	재고투자	-0.1	-0.5	0.6	0.6	0.5
	대외무역	-0.3	0.0	-0.1	-2.3	-2.7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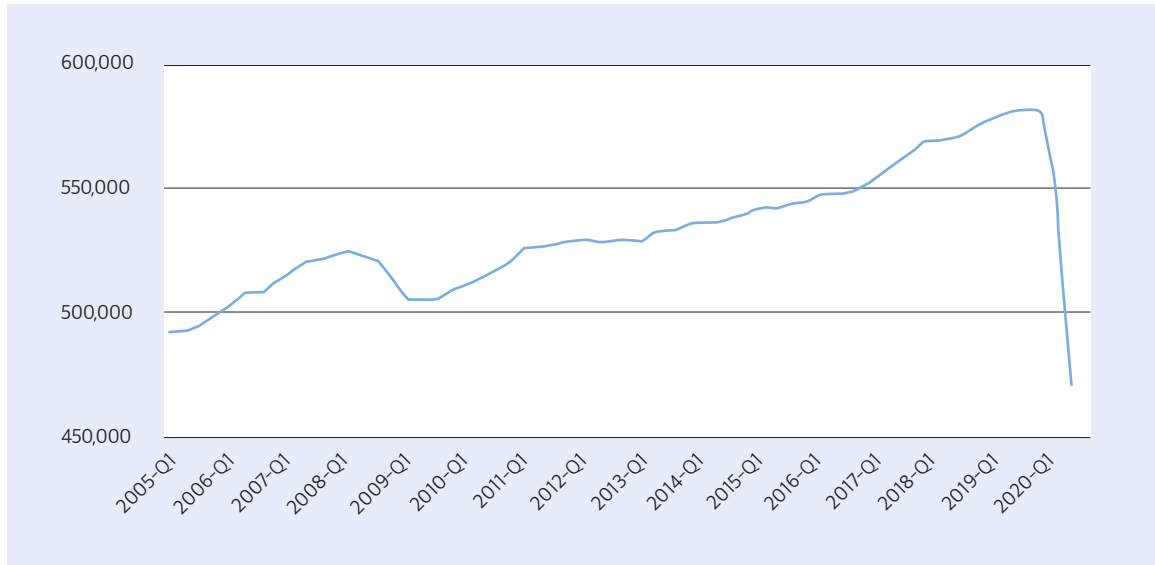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In Q2 2020, GDP shrank by 13.8%, 2020. 7. 31.

[그림 4] 프랑스 GDP 추이

(단위: 백만유로)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In Q2 2020, GDP shrank by 13.8%, 2020. 7. 31.

<표 6>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천명)

구분	2020 Q1	2020 Q2	증감		2020 Q2 실업자 수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8	7.1	-0.7	-1.3	2,043
15~24세	19.2	21.0	1.8	1.8	544
25~49세	7.2	6.4	-0.8	-1.4	1,110
50세 이상	5.4	4.4	-1.0	-1.9	389
남자	7.7	7.4	-0.3	-1.1	1,098
15~24세	19.3	21.4	2.1	0.9	299
25~49세	6.9	6.6	-0.3	-0.9	585
50세 이상	5.4	4.7	-0.7	-1.7	214
여자	7.9	6.8	-1.1	-1.6	945
15~24세	19.2	20.5	1.3	3.0	245
25~49세	7.5	6.3	-1.2	-1.8	525
50세 이상	5.5	4.0	-1.5	-2.2	175
장기실업률	3.0	2.2	-0.8	-1.1	620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2020. 8. 14.

■ 프랑스 통계청, 2020년 2분기 실업률 발표(2020. 8. 13.)³⁵⁾

- 2020년 2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1%로 전분기 대비 0.7%p, 전년 동기 대비 1.3%p 하락함
- 고용의 감소에도 실업률이 하락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민 선임연구원>



영국

[기타]

■ 영국 통계청, 2020년 2분기 GDP 성장률(1차 추계) 발표(2020. 8. 12.)³⁶⁾

- 영국의 2020년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20.4%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35)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0, the labour market under the influence of containment, 2020. 8. 13,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4642442>

36)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April to June 2020, 2020.8.12., 검색일자: 2020. 8. 19.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firstquarterlyestimateuk/apriltojune2020>



- 통계청의 분기 통계가 시작된 1955년 이래 가장 큰 하락으로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봉쇄 조치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영된 것임
- 다만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6월 GDP 성장은 다소 회복되어 전월 대비 8.7% 증가함

- 직전 분기 대비 2020년 2분기의 서비스 부문 생산은 19.9%, 생산업(production)은 16.9%, 건설업은 35% 감소
- 직전 분기 대비 2020년 2분기의 민간소비는 23.1%, 총고정자본형성은 25.5%(총자본형성은 37.5%), 정부 소비는 14.0% 감소
- 또한 수입 감소(23.4%)가 수출 감소(11.3%)

<표 7> 분기별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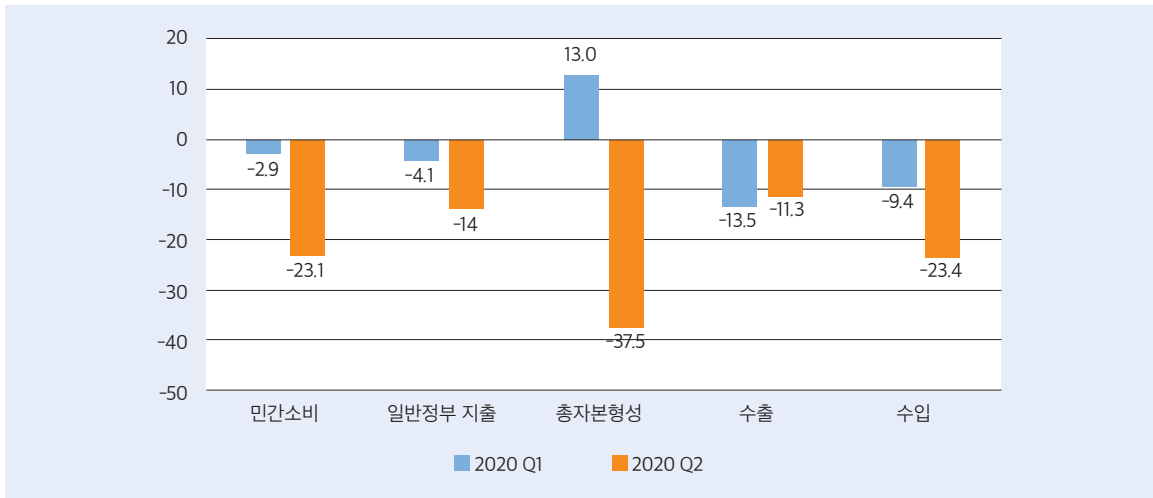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9			2020	
	Q2	Q3	Q4	Q1	Q2
실질GDP 성장률	-0.1	0.5	0.0	-2.2	-20.4
서비스업	0.2	0.6	0.1	-2.3	-19.9
생산업	-1.8	-0.3	-0.5	-1.5	-16.9
건설업	-0.6	0.5	-1.0	-1.7	-35.0
농림어업	-0.2	0.2	-0.1	-0.1	-4.8

출처: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April to June 2020, 2020. 8. 12.

[그림 5] 2020년 2분기 지출별 GDP 변화율(직전 분기 대비)

(단위: 백만유로)



주: 민간 소비는 가계 최종 소비 지출과 가계 지원 비영리 기관을 포함

출처: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April to June 2020, 2020. 8. 12., Figure 7.

보다 두드러져 2분기에 GDP 대비 4.0%의 무역 흑자를 기록

- 영국의 2020년 상반기 누적 GDP 성장률³⁷⁾은 -22.1%로 스페인(-22.7%)보다 다소 양호하지만 미국(-10.6%)의 감소율을 2배 이상 상회
- 2020년 2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21.7%를 기록

■ 문화·예술 기관 보호를 위한 자금지원 시행(2020. 7. 5.; 8. 14.; 8. 22.)³⁸⁾

- (개요)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5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국 전역의 문화·예술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자금(Culture Recovery Fund) 지원 계획을 발표함
 - 8월 22일에는 지원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
- (지원규모) 문화회복자금(Culture Recovery Fund) 지원은 총 15억 7천만파운드 규모임
- (지원내용) 정부는 긴급 보조금 및 대출을 통해 박물관, 갤러리, 극장, 문화재, 공연장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문화 인프라 공사 재개를 위한 자금을 지원
 - 잉글랜드 문화·예술 단체 지원(11억 5천만파운드)
 - (금융 지원(2억 7천만파운드)) 8월 21일부터 해당 단체는 300만파운드를 초과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의 지침에 따라 평가 후 문화회복위원회(Culture Recovery Board)에서 지원 결정

*상환 기한은 최대 20년, 상환 유예기간은 최대 4년, 연 이율 2%

- (보조금(8억 8천만파운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5만~300만파운드의 자금이 필요한 단체는 정부 보조금(총 5억 파운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금액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됨

*이 외에도 독립 영화관, 공연장, 문화 유적지 등에 대한 별도 보조금 지급 계획도 발표됨

- 잉글랜드의 국립 문화 기관들과 English Heritage Trust 지원(1억파운드)
- 문화 인프라 건설 및 잉글랜드의 문화재 공사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자본 투자(1억 2천만파운드)
 - Heritage Stimulus Fund(5천만파운드)를 통해 유적지 유지 보수를 시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재 전문가의 생계를 보호
 - 이 외에도 Cultural Capital Kickstart Fund(5,500만파운드), Heritage Capital Kickstart Fund(1,500만파운드)를 통해 기존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지원
-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 추가 지원(1억 8,800만파운드)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선임연구원>

37) 주요 국가의 2019년 4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실질 GDP 변화율

38) HM Treasury, £1.57 billion investment to protect Britain's world-class cultural, arts and heritage institutions, 2020. 7. 5. <https://www.gov.uk/government/news/157-billion-investment-to-protect-britains-world-class-cultural-arts-and-heritage-institution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Criteria announced for £270 million repayable finance scheme, 2020. 8. 14. <https://www.gov.uk/government/news/criteria-announced-for-270-million-repayable-finance-schem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Funding available through the Culture Recovery Fund, 2020. 8. 22. <https://www.gov.uk/guidance/funding-available-through-the-culture-recovery-fund>



중국

[예산·결산 등]

■ 재정부, 2020년 상반기 재정수입 및 지출(2020. 8. 10.)^{39), 40)}

- 2020년 상반기 일반공공예산(全国一般公共预算) 수입⁴¹⁾은 9조 6,17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7.9% 감소한 4조 4,347억위안, 5조 1,829억위안으로 집계됨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세수가 감소함
 -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가 종결되어 세입 감소

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상반기 일반공공예산 지출⁴²⁾은 11조 6,411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하였으며, 중앙정부 지출(中央一般公共预算本级支出)⁴³⁾은 1조 6,34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 지방정부 지출⁴⁴⁾ 10조 66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함
 - 감염병 예방 및 통제 관련 공중보건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8% 증가함
 - 전년 동기 대비 재정지출이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반공공서비스(一般公共预算服务), 국방(国防)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지출이 둔화되었기 때문임

<표 8> 2020년 상반기 일반공공예산 재정수입 및 지출

(단위: 억위안,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0년 상반기	
일반공공예산 재정수입(全国一般公共预算收入)	96,176	(-10.8)
중앙정부 재정수입(中央一般公共预算收入)	44,347	(-14.0)
지방정부 재정수입(地方一般公共预算本级收入)	51,829	(-7.9)
일반공공예산 재정지출(一般公共预算支出)	116,411	(-5.8)
중앙정부 재정지출(中央一般公共预算本级支出)	16,344	(-3.2)
지방정부 재정지출(地方一般公共预算支出)	100,066	(-6.2)

주: ()안은 전년 동기 대비 %

출처: 중국 재무부, 「2020년 상반기 재정 수입 및 지출 상황」, 2020.

39)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008/t20200810_3565024.htm

40)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jingshidian/zgcb/202008/t20200825_3574290.htm

41) 일반정부 기준을 의미하며,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조세수입(18개 세목)과 비조세수입(8개 세목)으로 구분

42) 재정지출은 분세제도 재정관리체제하에 중앙정부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로 구분,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일반공공서비스, 외교, 국방, 공공안전, 교육, 과학 기술, 문화체육 및 미디어, 사회보장 및 취업 등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

43) 주로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기관과 관련된 경비,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 지출 및 중앙정부 소관 사업 지출 등이 해당

44) 지방정부 기구의 경상적 지출, 지역경제 및 사회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지출 등이 해당

[기타]

■ 재정부, 예산관리체제의 개혁을 위해 예산법 시행규칙 개정(2020. 8. 24.)⁴⁵⁾

-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예산법 시행규칙을 이행해야 함
 - 예산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등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임
 - 최근 몇 년간 예산관리체계 개혁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개정내용은 예산 수입 및 지출의 범위 조정, 예산편성, 부처별 예산관리 강화, 이전지출제도 개선, 지방정부채무관리 표준화, 예산 성과관리, 예산 공개범위 확대 등임
 - (예산 수입 및 지출 범위 조정) 정부성 기금 예산, 국유자본운영 예산, 사회보험기금 예산의 수입 및 지출 범위 조정, 사회보험기금 예산의 수입원 세분화,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소득관련 개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개정됨
 - (예산편성) 예산안 편성기간* 명시, 예산수입 관련 표준화, 예산 수입 및 지출의 내역을 명

확히 제시해야 함

* 중앙의 경우 매년 6월 15일 이전 차년도 예산안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하고, 지방의 경우 매년 6월 30일 이전 차년도 예산안 관련 사항을 정함

- (부처별 예산관리 강화) 부처 예산의 통합 관리, 부처 예산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명시, 예산관리 및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함
- (이전지출제도 개선) 일반 및 특별 이전지출 관련 내용 및 개념 구체화, 특별이전지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체 메커니즘의 구축 및 개선 필요, 이전지출예산 표준화 필요
- (지방정부채무관리 표준화) 지방정부부채 관리방식의 개선, 일반 및 특별 부채의 정의 명확화 필요, 지방정부부채 리스크 평가 및 조기경보 메커니즘 개선, 지방정부부채 구조 및 발행기간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예산 성과관리) 예산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예산 성과의 구속력 강화, 재정부서에 명확한 역할 및 책임을 부여
- (예산 공개범위 확대) 일반이전지출 상세내역 공개, 법규에 따라 정부 채무, 기관 운영비, 정부조달 등에 대한 공시 필요, 부처 예산 및 결산에서 기본 지출과 프로젝트(项目) 지출 공개가 요구됨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선임연구원>

45)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008/t20200824_3573554.htm

재정포럼

2020년 9월호 통권 제291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편집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김석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0년 9월 15일 발행 / 제24권 제9호(통권 제29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주의!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①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②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③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



2020. 05. 06.

- 0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03 30초 손씻기·기침은 옷소매
- 04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
- 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